

▣ 정책연구

초·중·고 교과서의 편향성 분석

2006. 1

여의도연구소

【요 지】

□ 교과서 왜곡 상황

- 교과서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지적 능력을 계발하고 인격을 함양하는 기초 텍스트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술을 통해 학생들의 지적·인격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현재 초·중·고 교과서 중, 특히 역사, 사회, 정치 교과서는 이념적으로 상당히 편향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수 이론과 관점들이 게재되어 있는 실정임
 - 교과서의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과 사실의 왜곡은 일부 진보단체의 기본 논조와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추측됨
- 그동안 ‘교과서포럼’,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권철현 의원, 대한상공회의소, KDI 등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도 아래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초·중·고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기구에 의한 철저한 실태 분석과 교육관계법 개정을 통한 교과서 검정체계의 개편 등 다각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교과서 왜곡 실태 유형

<개괄>

- 투쟁사 중심의 편중적 기술과 我田引水식 역사 해석
- 그림·도표 등 자료의 활용을 통한 편향적 관점 주입
- 자주·민주·통일·분배·평등의 원칙에 따른 기술
- 남·북한 평가 잣대의 차별화를 통한 친북적 기술 등

○ 자유민주주의관의 왜곡 및 훼손

- 포퓰리즘적 민주주의관, 대의제와 법치주의 경시, 反체제·反정부 활동 옹호

○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 중도파와 좌파 중심의 건국운동 옹호, 분단원인의 왜곡 및 6.25전쟁 책임론 언급 회피, 사회주의 체제 선호

○ 自虐的 대한민국觀

- 민주투쟁사 관점의 역사 기술, 산업화 및 새마을 운동 성과 폄하, 친북적 역사 기술

○ 분열, 투쟁, 혁명의 역사관 주입

- 反제국주의적 역사 인식, 민중투쟁사 중심의 역사 인식

○ 북한체제에 대한 내재적·중립적·우호적 평가

- 내재적 접근, 북한에 대한 비판 회피, 친북적 자료의 활용과 사실 왜곡

○ 통일지상주의의 확산과 연방제 통일방안의 선호

- 감성적 통일지상론, 자유민주적 통일 언급 회피, 연방제 통일방안 선호

○ 反美 확산 의도와 親中 성향의 강화

- 미 군정의 부정, 친중 성향의 강화, 반미·자주 입장

○ 反시장·反기업 논리의 확산

- 반시장적 이념, 반기업적 정서, 과도한 사회적 책임, 친노조 성향

○ 反세계화 경향의 강화

- 개방에 대한 비판, 세계화의 역기능 부각

□ 목 차 □

◎ 요 지

1. 교과서 현황 /1
2. 교과서 편향성 분석 /2
3. 교과서 편향성 문제 개선방안 /20

【별첨자료】

- 초·중·고 교과서의 편향성 실태 /27

초·중·고 교과서의 편향성 분석

1. 교과서 현황

- 교과서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지적 능력을 계발하고 인격을 함양하는 기초 텍스트이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적·인격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함
- 그러나 현재 초·중·고 교과서 중, 특히 역사, 사회, 정치 교과서는 이념적으로 상당히 편향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수 이론과 관점들이 여과장치 없이 게재되어 있는 실정
- 교과서의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과 사실의 왜곡은 일부 진보단체의 기본 논조와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추측됨
- 그동안 ‘교과서포럼’,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권철현 의원, 대한상공회의소, KDI 등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도 아래 교과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해 왔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초·중·고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과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립적 기구에 의한 철저한 실태 분석과 교육관계법 개정을 통한 교과서 검정체계의 개편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긴요함

2. 교과서 편향성 실태

※ 초·중·고 교과서 중에서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도덕 분야 교과서 총 94권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이념편향성이 나타나고 있음

(1) 개 괄

□ 투쟁사 중심의 편중적 기술과 아전인수식 역사 해석

- 우리 근대사를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로 이해하여 反외세 민족투쟁사 중심의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동학농민운동과 항일의병 투쟁, 일제하 무장독립전쟁, 사회주의 운동 등의 비중이 큼
- 현대사는 분단과 민주화 투쟁사의 관점에서 기술함으로써 광복 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과 산업화 성과 등에 대한 폄훼와 북한 체제에 대한 왜곡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림·도표·과제·토론 등의 활용을 통한 편향적 관점 주입

- 교과서의 기술 내용과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부적절한 자료 제시를 통하여 교과서에 기술하기 어려운 편향된 역사인식을 교사가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교묘하게 마련
- 그림과 도표의 부적절한 대비와 심지어 편향적 편집을 통하여 미국과 우익의 활동은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반면 소련·중국·북한 등 좌익 활동은 긍정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음

□ 자주·민주·통일 및 분배·평등의 원칙에 따른 기술

- 정치·사회·역사 교과서의 경우 자주는 反외세·反美와 동의어로, 민주는 反독재와 참여민주주의로, 그리고 통일은 反戰평화와 통일지상주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음
- 경제 교과서의 경우, 분배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反시장·反기업 親노동·反세계화의 경향을 보임으로써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부정하는 경향이 강함

□ 남·북한 평가 잣대의 차별화를 통한 親北적 기술

- 해방이후 남북한의 친일과 청산을 지나치게 강조, 남한 우익정권의 불완전한 친일 청산을 비판하는 반면 북한의 ‘민주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모습을 보임
- 남한의 현대사에 대해서는 민주화 투쟁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自虐의 모습을 보이거나, 북한에 대해서는 통일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기술하거나 또는 내재적 접근을 통해 對북한 비판을 회피함으로써 북한 인권문제 등의 제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2) 자유민주주의觀의 왜곡 및 훼손

□ 포퓰리즘적 민주주의관

- 개인의 자유보다는 참여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포퓰리즘으로 오해할 소지를 주고 있으며 민주적 품성이 비판과 저항의식으로 인식되어 대화와 관용의 정신을 경시하는 경향
- ☞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 법이 만들어진다.” <중학교 사회 3, 교학사, p. 11>
- ☞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 현실을 바꾼다] … [교수는 ‘새로운 권력은 이제 총구가 아닌 마우스 클릭에서 나온다’고 전망했다.]” <중학교 사회 3, 금성출판사, p. 38>

□ 대의제와 법치주의 경시

- 정치와 정당을 불신하고 시민단체의 불법활동을 옹호, 대의제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직접 투쟁의식 고취
- ☞ “그러나 최근,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각 정당의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고,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을 통한 정치참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 사회 3, 금성출판사, p. 31>
- ☞ “[<그림3>시민들이 국민주권 실현을 외치며 일어섰던 5.18 민주화 운동], [<그림4>국민참정권 원천봉쇄! 선거법 개정 규탄집회-지역감정, 개악선거법, 부패정치, 음모론]등의 자료” <중학교 사회 3, 교학사, p. 85>

□ 反체제·反정부 활동 옹호

- ‘양심수’ 표현을 사용하여 이들의 석방을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폐해를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국보법 폐지의 정당성을 선전
- ☞ “... 양심에 따라 행동하다가 범죄자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을 풀어주는 등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처벌받고 고통을 겪는 이웃들이 적지 않다.” <중학교 사회 2, 교학사, p. 123>
- ☞ “노동자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이 힘을 얻었다. 마르크스를 비롯한 여러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사유재산제도를 비판하고 빈부 차이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이상으로 생각하였다.” <중학교 사회 2, 성지문화사, p. 61>

(3)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 중도파와 좌파 중심의 건국운동 옹호

-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건국준비위원회와 좌우합작운동의 역할을 중시하고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성과 우익의 건국운동을 폄훼
- ☞ “국내외 여러 정치세력들은 새로운 정부 수립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여운형 등은 일제 말 조직한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각 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식량을 비롯한 생활필수품 확보에 노력하였다.”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54>
- ☞ “좌·우 합작위원회는 좌·우 양쪽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더구나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뒤에 미 군정이 단독정부 수립을 지지하게 되면서 차츰 설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렇지만 좌·우

합작운동은 그 후에 전개된 통일민족국가 수립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대한교과서(주), p. 255>

□ 분단 원인의 왜곡 및 6.25전쟁 책임론 언급 회피

- 분단의 원인을 이승만의 단정노선과 미·소 등 외세에 원인을 돌리면서 우익은 분열세력으로 좌익은 통일세력으로 기술하고, 6.25전쟁 책임론 언급 회피

☞ “미·소공동위원회가 깨어지자 미국은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유엔에 한국의 문제를 넘겼다. ... 남한에서 정부가 세워진다면 이는 북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였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길로 치닫게 되었다.”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61>

☞ “<도움자료>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분단 이후 냉전체제 아래서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불행을 겪었다. 이는 민족 내부의 분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전쟁이기도 하지만, 지난날 강대국의 식민지 침략이 남겨준 상처에다 미국과 소련의 새로운 개입과 간섭이 더해져 빚어진 결과이기도 하였다.” <중학교 사회 2, 고려출판, p. 124>

□ 사회주의 체제 선호

- 당시 우리 민족은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사회주의를 선호했으며 미국이 없었다면 사회주의 국가건설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암시

☞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53>

☞ “그러나 미군정은 한국인들이 만든 모든 행정기구와 그 활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인민공화국이나 지방인민위원회의 활동은 커다란

지장을 받았다.”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55>

(4) 자학적(自虐的) 대한민국觀

□ 민주투쟁사 관점의 역사 기술

-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1987년 6월 항쟁까지의 대한민국 현대정치사를 민주투쟁사적 관점에서 평가하면서, 특히 박정희 정권을 ‘민주주의의 시련’이라는 틀로써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주력

☞ “6.25 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는 장기 집권을 모색하였다. 이로 인해 독재정치와 부정·부패를 일으켰고, 결국 4.19 혁명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 민주당 정부는 5.16 군사정변으로 막을 내렸다.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 1980년대 중반 들어 군부정권의 통치에 대한 국민의 저항과 민주화 요구는 날로 거세졌다. 그 결과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는 무너지고, 한국 사회는 점차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76>

☞ “경제성장의 결과 늘어난 중산층과 근로자는 박정희 정부의 개발독재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점차 민주화를 열망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p. 343>

□ 산업화 성과에 대한 폄훼

- 5천년 역사에서 경제발전의 기적을 이룩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 성과에 대해 의도적으로 폄훼하고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을 지나치게 부각

☞ “개발독재란 개발도상국에서 경제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독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전대통령이 집권했던 1961년에서 1979년의 기간은 개발독재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런 기술이나 자본이 없는 후진국에서 경제개발을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강력한 주도가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경제개발은 정경유착, 부정부패, 노동자의 인권 탄압, 경제력 집중, 소득 격차 등 많은 문제를 낳기도 한다.”

<고등학교 경제, 교학사, p. 31>

☞ “1970년대 공업화 정책에 따라 농수산업은 더욱 침체되었다. 당시 중화학공업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공해 등의 문제로 선진국에서 쇠퇴하는 분야였다. 또한 각종 기계나 기술은 일본에서 도입하고, 공장을 일본 자본으로 건설함에 따라 한국 경제는 자본과 기술에서 미국뿐 아니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커져 갔다.”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328>

□ 새마을 운동에 대한 폄하

- 새마을 운동에 대해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는 외면하고 장기집권용으로 왜곡 평가

☞ “새마을 운동은 겉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이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주도하였다. 이 때문에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334>

□ 親北적 역사 기술

- 대한민국 현대사는 反독재투쟁의 관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기술한 반면, 북한은 통일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기술

☞ [주요 연표]

남한(p.276): 4.19 혁명(1960)→5.16 군사정변(1961)→한·일 협정(1965)→
10월 유신(1972)→5.18 민주화운동(1980)→6월 민주항쟁(1987)

북한(p.298): 7.4 남북공동성명(1972)→남북 고향방문단 상호교류(1985)→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1991)→KEDO,
북한 신포에 경수로 착공(1997)→남북정상회담(2000)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76, 298>

☞ “6.25 전쟁으로 피해를 복수한 북한은 본격적인 사회주의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중략)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워 세계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부분적인 개방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98>

(5) 분열, 투쟁, 혁명의 역사관 주입

□ 반제국주의적 역사 인식

- 19세기의 한국 근대사를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에 따라 제국주의의 침탈사로 기술

☞ “[제국주의 시대의 전개] ... 19세기 후반에는 자본주의가 급속한 발달을 이루어 독점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에 도달하였다. ... 이처럼 독점적 자본주의와 침략적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열강들이 1870년대부터 경쟁적으로 후진 지역을 침략하여 식민지화해가면서 이른바 제국주의 시대가 전개되었다.”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 p. 26>

☞ “2단원. 제1장.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혁”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38>

□ 민중투쟁사 중심의 역사 인식

- 동학운동과 의병항쟁 등 反외세 민중투쟁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사의 전개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해방 이후 좌파운동과 민주화 운동과도 연결됨

☞ “한편, 조선후기의 사회 경제적인 변동 속에서 각성한 민중들은 사회의 변화를 갈망하며 양반 관리들의 압제와 수탈에 항거하였다. [읽기자료: 「동경대전」의 포덕문에 나타난 동학의 서양관] ... 서양인은 싸워서 이기고 빼앗아 뜻대로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 p. 12>

☞ “1946년 9월에는 미군정의 사회, 경제정책에 반발하는 철도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일어났다. ... 이러한 봉기는 경찰이나 우익 청년단체들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되었다.”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60>

(6) 북한체제에 대한 내재적·중립적·우호적 평가

□ 내재적 접근

- 북한 정권의 성립과 변화를 송두율식의 내재적 접근법에 따라 북한의 현실과 사회주의에 대한 중립적·우호적 기술

☞ “북한 사회 또한 우리 민족이 살아온 삶의 터전이다. 북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회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다만 남한과 달리 사회주의의 길을 갔을 뿐이다.”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8>

☞ “대중의 정신력에 호소하여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천리마운동을 통해 경제건설을 추진한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는 3년만에 달성되었다. 그러나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농업과 공업간의 불균형이 심해지는 등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301>

□ 북한에 대한 비판 회피

- 남한 역사에 대해서는 反독재 투쟁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적 평가를 회피하면서 사실의 기술에 그침

☞ “6.25 전쟁의 피해를 복수한 북한은 본격적인 사회주의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김일성 1인 체제를 강화하고, 김정일 후계체제를 확립하여 갔다. 이 과정에서 주체사상이 북한의 유일사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사정의 악화와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한 사회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였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워 세계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부분적인 개방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98>

□ 편향적 자료의 활용을 통한 우호적 對北 인식 고취

- 루이제 린저 같이 북한에 대한 광신적 지지자의 기록을 소개하여 북한사회를 선망하게 하거나, 사실의 왜곡을 통해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음

☞ “[한결음 다가서기: 북한 방문자들이 말하는 주체사상] 김일성은 결코 이론가가 아니다. ... 그가 주체사상 속에서 언급한 것은, 나름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 정책의 직접적 수행 지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의 교시는 곳곳에서 인용되며 거기에 인민들이 늘 귀를 기울이고 있다. (루이제 린저, 북한이야기)”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302>

(7) 통일지상주의의 확산과 연방제 통일방안의 선호

□ 감성적 통일지상주의 확산

- 통일의 미래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한 환상만을 강조하여 통일 과정의 부담에 대한 언급은 회피함으로써 통일지상주의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교 교과서가 특히 심각함

☞ “[별에게] ...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이 많아. 같은 조상을 섬기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문화를 가진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도와주면서 살아간다면 큰 힘이 될 거야. 특히, 서로의 가슴을 향해 총부리를 저늘 필요가 없고, 무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절약할 수 있겠지. 그 돈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좀더 좋은 시설의 학교도 만들 수 있을 거야.” <초등학교 도덕 3-2, p. 88>

☞ “[통일이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중략) 현재 남북이 연결을 추진하고 있는 경의선, 동해선이 중국, 러시아의 철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철도를 이용해서 이들 나라 및 유럽 국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한편 풍부한 시베리아 내륙 지방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학교 사회 3, 교학사, pp. 178~79>

□ 자유민주적 통일 언급 회피

- 자유민주주의에 따른 ‘바른 통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북한의 경제난과 인권유린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없음

☞ “[베트남과 예멘의 통일] ... 분단 이후 남베트남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단체인 ‘베트남민족해방전선(베트콩)’이 남베트남 정부와 전쟁을 하였다. ... 1975년에 북베트남과 베트콩에 의해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이 점령됨으로써 베트남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초등학교 사회과 탐구 6-1, p. 141>

- ☞ “우리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이라는 통일의 기본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는 남북간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상호 공존과 협력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통일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정치, 천재교육, p. 266>

□ 연방제 통일방안 선호

- 남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소개하지 않고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이 공식 통일방안처럼 소개하고 있으며,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남한의 공화국연합제 통일방안]

남한의 통일방안은 공화국 연합→연방제→완전통일의 3단계 통일방안이다.”
<고등학교 정치, 지학사, p. 238>

- ☞ “이념보다는 민족의 이익이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잡게 되면서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2000년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에서는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설정한 제2단계인 남북연합단계와 북한의 연방제가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중학교 사회 3, 고려출판, p. 180>

(8) 反美 확산 의도와 親中 성향의 강화

□ 美 군정 비판

- 건국시기 미군정의 역할을 美제국주의의 남한 통치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으며, 분단 원인을 비롯하여 개혁의 실패 원인을 미군정에 전가시키고 있음

☞ “미군정과 새로 들어선 정부는 군인과 경찰, 우익 청년단체들을 동원하여 유격대를 진압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만명의 제주도민들이 함께 희생되었다.”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63>

☞ “미 군정은 우리 민족의 역량이나 민족적 염원을 무시하고 친미적인 우익정부 수립을 후원하기 위하여 한국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우익세력을 지원하였다. ... 한편,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초기에는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인민위원회에 행정권과 치안권을 넘겨줌으로써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조한 친일파를 배제시켰다.”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p. 275>

□ 親中 성향의 강화

- 해방 정국의 서술에서 내용과 거의 무관하게 모택동의 사진과 非동맹운동이 필요 이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진보 세력(전교조)의 반미·친중 노선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임

☞ [모택동(사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중국에서는 국민당군과 공산당군 사이에 내전이 다시 일어났다. 대중의 지지를 받은 공산당군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세웠다. 반면, 패배한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으로 쫓겨갔다.”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50>

☞ [비동맹세력의 지도자들(사진)]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51>

□ 반미·자주 입장

- 우리 사회의 해악은 미국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은 물론, 미국을 분단 고착과 통일 방해세력으로 간주하여 반미 입장을 견지하면서 반미가 곧 자주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음

☞ “[역사의 현장]<일장기 내려진 자리에 성조기가 올라가다> ...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은 자주독립을 위한 시련의 출발점이기도 하였다.”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56>

☞ “[남북에 들어온 미군과 소련군]

<자료1: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포고령 1호> (제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한다. ...

<자료2: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포고문> ... 조선 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여러분들 수중에 있다. 여러분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았다...

<과제1> 미 군정은 한국인의 자치적인 행정과 치안활동을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일제하에서 일했던 친일 관리들을 계속 채용하였다. <자료1>에서 미 군정의 이러한 정책을 엿볼 수 있는 조항을 찾아보자.”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57>

(9) 반시장·반기업 논리의 확산

□ 반시장적 이념

- 분배문제에 있어서 시장경제에서는 편향적이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으로 기술하여 사회주의 국가가 우수하다고 간접 시사

- ☞ “경제적 대가를 어려움 없이 지불할 능력을 갖춘 소수의 부자들이 그 생산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수의 빈곤층이 이용할 수도 있다. ...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반면 북한이나 쿠바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똑같이 분배된다.” <고등학교 경제, 두산, p. 26>

□ 反기업적 정서

-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적 경제관 노출

- ☞ “소유자 중심 체제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변화를 꾀하는 기업만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사업 영역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 경영인에 의한 관리 체제로의 과감한 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경제, 두산, p. 134>

□ 청교도적 윤리관의 지나친 강조

- 가족들끼리 외식하는 것조차 부정적으로 묘사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있으며, 소비에 있어 청교도적 윤리관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음

- ☞ “요즈음 음식점에서 가족끼리 오붓하게 외식을 즐기는 모습이 흔히 눈에 띄는데, 단란한 가정과 생활의 여유를 보여 주는 흐뭇한 광경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들에게서 또 다른 일면, 우리도 이제 이 정도의 외식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왕성한 소비 욕구 이외에도 자기 가족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가 엿보인다. 굶주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웃에 있어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와 내 가족만 마음껏 먹고 분에 넘게 써도 된다는 태도는 윤리적으로 병든 상태이다. 사치와 낭비가 이기적이며 도덕적인 타락인데 비해서, 근검절약과 절제, 금욕 등은 그 자체가 도덕적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고등학교 생활경제, 대한교과서, p. 134>

☞ “서양의 자본주의 경제가 200년의 역사 속에서도 타락하지 않고 찬란한 물질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청교도적 생활 철학이 물질 만능으로 흐르기 쉬운 자본주의 경제를 순화시키고 여과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후진 국가 사회는 경제적 파탄과 혼란, 그리고 계층 간의 대립을 겪고 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건전한 윤리 의식이 밀받침되지 않은 채 제도로서의 시장 경제를 물질 만능으로 잘못 이해하고 운용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경제, 천재교육, p. 13>

□ 사회적 책임의 과도한 강요

-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은 기업 활동 속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의무처럼 기술하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음

☞ “한편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업은 한 경제 사회 안의 소비자, 근로자, 다른 기업, 정부 등과 밀접한 상호 의존 관계를 맺으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를 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은 육영 사업을 통한 인재 육성, 의료 사업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문화 사업을 통한 문화발전, 사회 복지 사업을 통한 사회 보장의 증진, 장학 사업을 통한 교육 수혜 제공, 체육·레저 사업을 통한 여가 선용 기회의 확대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고등학교 경제, 두산, p. 137>

□ 소등불평등에 대한 강조

- 80대 20사회가 신자유주의의 필연적 결과라고 단정하고 소득불평등을 병리학적으로까지 지적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우려가 많음

☞ “부와 소득의 편재 현상을 설명하는 ‘80대 20 법칙’이 현대 사회에서 설득력을 갖는 것은 소비의 양극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인구 1.6%가 국민 총 소비의 25%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80대 20 사회’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하더라도 소득 불평등에 따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병리학적이다.” <고등학교 경제, 천재교육, p. 144>

□ 親노조 성향

- 지하철 노조의 파업 원인으로 노조측의 파업 정당성은 간과한 채, 사용자측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서 파업이 일어났다는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친노조 성향을 보임

☞ “지하철 노조는 왜 파업을 했던 것일까? 근무조건 개선, 복지 향상, 임금 인상 등을 사용자 측에 요구하였으나, 사용자 측이 들어주지 않아 그랬을 수도 있다.” <고등학교 정치, 지학사, p. 86>

(10) 反세계화 경향의 강화

□ 개방에 대한 비판

- 국제화와 개방화가 사치와 과소비를 초래하고 범지구적 무한경쟁이

과외적 경쟁을 부추긴다는 근거없는 편향된 서술을 하고 있음

☞ “국제화와 개방화의 진전은 사람들의 소비의식과 소비문화에 대한 방향 감각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내시장의 개방에 따른 외국상품의 범람은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산업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고, 지나친 전시적인 소비는 사치와 향락 및 과소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등학교 생활경제, 대한교과서, pp. 34~35>

□ 세계화의 역기능 부각

- 세계화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지나치게 강조

☞ “세계화가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렇지 않다. 국내의 약소 기업은 무한 경쟁에 부딪힘과 동시에 정부의 보호나 지원도 받을 수 없어 도산하게 된다. ... 그런데 세계화가 낳는 더 큰 어려움은 국내의 빈곤 문제나 실업 문제, 그리고 지역적 불균등 발전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기업이 좀 더 큰 이익을 찾아 자유롭게 이동하고 각국 정부가 이러한 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하지 못한다면 어느 나라에는 빈곤이 심화되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고등학교 경제, 두산, p. 132>

3. 교과서 편향성 문제 개선방안

(1) 교과서 검정 및 채택의 문제점

1) 검정의 객관성 문제

- ‘교과용도서관련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검정 이후 교과서 내용에 오류, 수정할 부분 등이 발견될 경우 저자가 요구하여 수정하기도 하며, 교육인적자원부 담당자가 직접 제기하여 직권으로 수정하기도 함으로써 검정 이후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수정 시 객관적 기준에 의한 객관적 판단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음

제26조 (수정)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 (개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국정도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

2) 검정의 가치 중립성 문제

-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9조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교과서 검정 기준 선정 및 교과용도서심의위원 선정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장관 및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관이 직·간접적으로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음

제19조 (심의회의 구성) 각 심의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4.6.19>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담당 기구의 독립성 문제

- 규정상 교과서 검정기준을 선정하고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교과용 도서심의회’를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두도록 되어 있지만, 조직의 독립성에 대한 규정은 없음

제18조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인정·가격사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6.19>

- 형식적으로 교과서 검정 실무 작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과서 검정의 주요 부분(검정기준, 범위, 심의위원 선정 등)을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교과서 검정이 자칫 여타 기관 및 정치적 압력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음

4) 교과서 채택의 임의성 문제

- 교과서 출판사별로 개별 교과서에 대한 설명서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서로 다른 교과서간에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음
- 따라서,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는 경우, 교과전담교사들이 심의하여 일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순위를 매겨 학교장이 최종 선정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학부모 등이 교과서 선택시 각 교과서의 가치 및 이념적 지향성, 내용 등에 대해 판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기준의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교과서에 대해 교사나 학부모들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결국 영향력 있는 학교 인사들이 임의적 기준으로 교과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음
- 그 과정을 통해 학교와 출판사간의 불법적 관계가 발생하기도 함

(2) 개선방안

1) 교과서 검정 4대 기본원칙

○ 객관성

- 교과서 검정 기준, 채택 기준 등에 있어 최대한의 객관성 확보

○ 중립성

- 교과서 검정 심의위원 선정에 있어 이념 및 가치관의 편향성을 줄일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확보

○ 독립성

- 관련 기관 및 정치적 압력 등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조직 확보

○ 공개성

- 교과서별 내용의 수준, 이념 및 가치 지향성 등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평가자료 제시

2) 교과서 검정 조직 개편

○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 구성

-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로 확대하여 교육부 산하 상설 독립기구화 함

○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의 설립근거 마련

-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설립근거를 삽입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장 개정

- 심의기준과 심의위원 선정을 담당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를 독립 상설화하여 교과서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지도록 함

○ 심의위원 선정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중립성 강화

- 관련학계, 교육단체(교총, 전교조),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관련국책연구소, 교육인적자원부 등으로부터 심의위원을 단수 추천 받음
- 추천된 자들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심의위원으로 승인

3) 검정업무 개선

○ 검정업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담당하게 함

-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가 상설기구화 되면서 검정 실무를 담당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부의 상설 조직 및 인원을 확충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 실무를 담당한다는 사실을 명기

4) 교과서 비교·분석 및 내용 공개 업무 개선

○ 교과서별 내용의 비교·분석 및 공개는 학교별 교과서 선정시 객관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교과서 비교·분석 및 내용공개 업무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담당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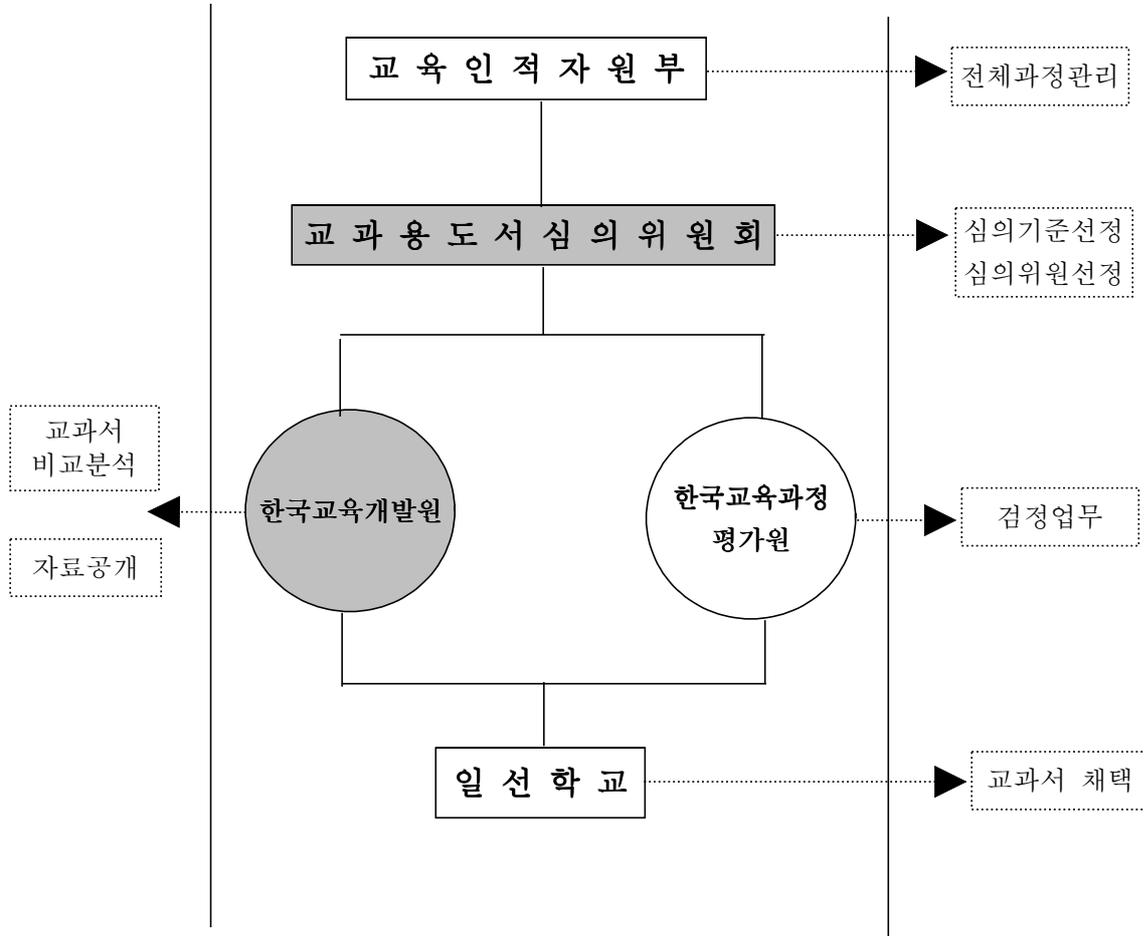
- ‘한국교육개발원’은 검정된 각 교과서의 내용 수준, 이념적 지향성 등에 대한 비교·분석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교과용도서어관한규정’을 개정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이 교과서의 비교·분석 및 정보 공개를 담당한다는 사실을 명기

5) 교과서 채택과정 개선

- 학교 규정에 교과서 채택과 관련된 명확한 절차를 명시
- 가능한 한 전체 교사와 전체 학부모들이 교과서 채택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소수의 학교 인사들에 의한 임의적 채택을 방지하도록 함

【교과용 도서 검정 관련 조직도】



※ 신설 조직 및 업무

-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독립기구)
- 교과서 비교·분석 및 자료공개 (한국교육개발원)

▣ 별첨자료

초·중·고 교과서의 편향성 실태

2006. 1

여의도연구소

■ 목 차 ■

I. 고등 교과서의 문제점 분석 /1

1. 자유민주주의관의 왜곡 및 훼손 /1
2. 대한민국 건국과 정통성 부정 및 6.25전쟁 책임론 회피 /2
3.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자학적 평가 /6
4. 특정 정치지도자에 대한 편파적 평가 /8
5. 민중사관의 역사 기술 /10
6. 북한체제에 대한 우호적·중립적 평가 /13
7. 통일지상주의의 확산과 자유민주적 통일 회피 /16
8. 반미주의 및 친중적 인식 /18
9. 반시장 /20
10. 반기업 /26
11. 반세계화 /29
12. 기타 /31

Ⅱ. 중등 교과서의 문제점 분석 /32

1. 자유민주주의관의 왜곡 및 훼손 /32
2.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 부정 /37
3. 6.25전쟁 성격의 왜곡 /37
4. 특정 정치지도자에 대한 편파적 평가 /38
5. 민중사관의 역사 기술 /39
6. 북한체제에 대한 우호적·중립적 평가 /40
7. 통일지상주의의 확산과 자유민주적 통일 회피 /45
8. 반미주의 및 친중적 인식 /46
9. 반시장-반기업 /47
10. 배타적 세계관 /50
11. 기타 /51

Ⅲ. 초등 교과서의 문제점 분석 /52

【분석자료 목록】 /55

I. 고등 교과서의 문제점 분석

1. 자유민주주의관의 왜곡 및 훼손

출 처	원 문	문 제 점
정치 (지학사) p. 22	(탐구) 나는 얼마나 민주적인 학생일까? 라는 주제의 평가 문항들이, 1. 담임선생님이 하는 일은 잘못이 있더라도 받아들인다. 2. 반장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의 지시에 항상 복종해야 한다. 3. 학교의 교칙이 학생들의 생활과 맞지 않아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4. 우리반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학급의 주요한 결정은 담임선생님이나 학급반장이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등이 항목에 × 표를 할 경우 민주적 생활태도 점수로 인정	민주적 품성이 비판과 저항의식으로 인식될 수 있는 항목들만 구성하여 민주주의를 오해할 소지가 있으며, 대화와 관용의 정신이 강조되어 있지 않음
정치 (지학사) p. 25	개인의 자유는 어떤 정치권력보다 우선하고 개인이나 집단 혹은 국가 권력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로 보았다. (중략) 이처럼 자유는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 즉 외부로부터 각종 구속이나 타율적인 강제를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였다.	개인의 자유를 방종과 구분하지 않고,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자유의 제한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를 마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구로 인식하도록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

2. 대한민국 건국과 정통성 부정 및 6.25전쟁 책임론 회피

출 처	원 문	문 제 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7	흔히 한국의 현대사를 ‘분단의 역사’라고 말한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특징인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무시하고 분단만을 강조하여 우리 현대사를 부정하고 폄훼
한국 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 p. 23	남북한에는 분단 상황을 구실로 1인 독재체제가 강화되고, 그 해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계속 이질화시키면서 자체의 유지 기반을 마련해 왔다.	남·북한을 동일한 체제로 인식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54	<과제 2>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 활동이 자주민족국가 수립으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토론해 보자.	건준과 인민위원회가 자주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조직으로 긍정 평가하면서 미군정 때문에 자주민족국가가 수립될 수 없었다는 답변을 유도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53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연합군의 승리로 인한 광복 자체가 우리의 주체적 국가건설에 장애가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당시 우리 민족이 사회주의를 원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기술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55	그러나 미군정은 한국인들이 만든 모든 행정기구와 그 활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인민공화국이나 지방인민위원회의 활동은 커다란 지장을 받았다.	인민공화국이나 지방인민위원회 등 좌익단체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58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을 둘러싸고 좌익과 우익 사이에는 격렬한 대립이 일어났다. 우익은 신탁통치 실시를 반대한 반면, 좌익은 회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찬성하였다.	회의의 초점을 기존의 반탁·찬탁 논쟁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결국은 좌익의 찬탁 입장을 독립국가 수립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왜곡하려는 의도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60</p>	<p>1946년 9월에는 미군정의 사회, 경제정책에 반발하는 철도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일어났다... 이러한 봉기는 경찰이나 우익청년단체들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되었다.</p>	<p>총파업과 민중봉기를 경찰과 우익 청년단체들이 진압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우익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어줄 의도</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61</p>	<p>세계 곳곳에서 본격적으로 ... 미·소 공동위원회가 깨어지자 미국은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유엔에 한국의 문제를 넘겼다... 남한에서 정부가 세워진다면 이는 북한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였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길로 치닫게 되었다.</p>	<p>남한의 이승만과 미국이 단독정부 수립을 단행함으로써 분단의 원인을 먼저 제공한 것으로 기술</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63</p>	<p>미군정과 새로 들어선 정부는 군인과 경찰, 우익 청년단체들을 동원하여 유격대를 진압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 만 명의 제주도민들이 함께 희생되었다.</p>	<p>48년 4.3 제주사건에 대한 미군정과 우익의 양민 학살만을 부각시킬 뿐, 4.3 사건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회피</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322</p>	<p>[불안정한 토지개혁, 절반의 성과]</p>	<p>미군정과 남한정부의 토지개혁은 실패한 反農정책으로 평가</p>
<p>한국 근현대사 (대한교과서) pp. 252~260</p>	<p><자료 1> 북한 정권이 수립되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소련군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서 무상몰수, 무상 분배 원칙에 따른 토지개혁, 주요 산업 국유화, 남녀 평등법 제정, 8시간 노동제 실시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산주의 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p>	<p>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의 출범에 관한 내용 서술에 있어서 남한 정부의 경우 좌우 합작의 실패, 이승만 남한 단정 주장, 4·3사태, 친일파 청산 실패 등을 핵심으로 제시한 반면, 북한의 경우 간략하게 실제 정책의 성과와 관계없이 그들이 내세운 정책을 나열하여 북한 정권을 우호적으로 묘사하여 결국 남한 정부는 태동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정부로 인식되도록 하고 있음</p>

<p>한국 근현대사 (대한교과서) p. 255</p>	<p>[남북한 제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의 공동성명(1948. 4)] 김구와 김규식은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북한 대표들과 남북한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를 열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외국군대의 즉시 철수, 외국군대 철수 후 내전 발생 부인, 조선정치회의 구성 후 총선거를 통한 통일 정부 수립, 남한 단독선거 반대 등이었다. 남북 협상에 참여했던 김구와 김규식 일행은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외국군대를 즉시 철수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총선거에 불참하면서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펼쳐 나갔다.</p>	<p>이 회의는 북한과 소련에 의해 주도되어 남한의 단정 수립을 반대하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음. 특히 이 회의 이후 북한은 현재까지 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제외하고, 해외동포까지 포함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바, 그 정통성을 김구와 김규식이 참석했던 점을 들고 있음. 이로 인하여 김구와 김규식의 통일 노력은 평가될 만하나, 북한의 정치술수에 이용되었다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음</p>
<p>한국 근현대사 (법문사) p. 19</p>	<p>(중략)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어 북한에서도 공산정권이 수립되었다. 그리하여 국토와 민족이 분열되고, 마침내는 6.25 전쟁을 겪게 되었다. 전쟁은 일단 그쳤으나 휴전상태는 계속되어 (중략)</p>	<p>이 문장을 보면 남한과 북한에 서로 다른 성격의 정권이 세워지면서 남북분단이 초래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남침에 의한 6.25 전쟁의 발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거론하지 않고 다만 서로 다른 정권이 생겼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기술하고 있음. 청소년들로 하여금 6.25 전쟁의 책임이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는 대목임</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68</p>	<p>[6.25 전쟁] 남북 사이의 무력 충돌도 적지 않았다. 지리산을 비롯한 남한 곳곳에서도 북한을 지지하는 무장 유격대의 활동이 계속되었다. 38도선 곳곳에는 국군과 북한군 간에 크고 작은 충돌이 설 새 없이 일어나고 있었다.</p>	<p>북한의 ‘反김일성 투쟁’에 대한 사례 제시는 전혀 없으며, 북한정부가 남측 민중의 지지도 받는 정부였음을 암시. 또한 6.25 전쟁 도발의 책임론보다는 통일을 위한 민족 내전의 성격으로 설명하려는 의도 보임</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70</p>	<p>그러나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바뀌었다. 중국군과 북한군에 패한 국군과 유엔군은 이듬해 1월 초 ... 이 과정에서 중국군의 뒤를 이어 1951년 초 소련 공군도 전쟁에 부분적으로 참전하였다. 이제 전쟁은 본격적인 국제전의 성격을 띠었다.</p>	<p>‘중국군’이라 ‘중공군(중국공산당군, 인민해방군)’이란 표현을 피하고 있으며, 국제전으로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여 전쟁 도발의 책임론을 피해가고 있음</p>
<p>한국 근현대사 (두산) p. 264</p>	<p>[탐구과제 : 통일정부를 세울 것인가, 단독정부를 세울 것인가?] <자료 1> 이승만이 주장한 남조선 임시정부 수립과 민족주의 통일기관의 설치의 필요성... <자료 2> 민족자주연맹 중앙 집행위원회의 당면문제에 대한 결의문... <자료 3> 좌우합작위원회의 합작 7원칙...</p>	<p>이승만의 단독정부론을 비판하고 이승만을 분단에 기여한 反통일세력으로 비판하려는 의도를 보임</p>

3.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자학적 평가

출 처	원 문	문 제 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33	<자료 1> 경제적 근대화의 의미 (임종철, 『근대화의 이념과 한국경제』) <자료 3>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경제 자립을 이루어야 한다. (김진균,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조직형성과 그 전망』)	이 자료들은 학생운동권의 이론서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분배와 자주를 강조하여 우리의 근대화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64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이승만 정부에 대한 시종일관 부정적 기술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p. 276~297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긍정적 역사 소개는 거의 하지 않고 사진이나 자료 등을 포함하여 시종일관 반독재투쟁의 역사로 기술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81	“붓물처럼 쏟아진 각 사회세력의 주장”	자료의 출처 제시 없이 사회주의적 시각에서 우리 현대사를 비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86	[경제개발과 반공의 구호 아래...]란 제목 박정희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개발과 반공을 국가 운영의 전면에 내세웠다. 한일 국교정상화와 베트남전 참전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과 반공을 정권의 정당성 확보, 장기집권을 위한 것으로 폄훼하며 경제발전 에 대한 평가를 회피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76, p. 298</p>	<p>[주요 연표] (남한): 4.19 혁명(1960)→5.16 군사정변(1961)→한·일 협정(1965)→10월 유신(1972)→5.18 민주화운동(1980)→6월 민주항쟁(1987) (북한): 7.4 남북공동성명(1972)→남북 고향방문단 상호 교류(1985)→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1991)→KEDO, 북한 신포에 경수로 착공(1997)→남북정상회담(2000)</p>	<p>남한(p.276) 연표는 4.19혁명부터 87년 6월 항쟁까지 反독재투쟁의 관점에서 작성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기술한 반면, 북한(p.298)은 통일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성하면서 각각의 성과를 북한이 독식하고 있음</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327</p>	<p>[경제성장, ‘한강변의 기적’을 이루었으나...]</p>	<p>제목부터 부정적으로 잡음으로써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강하게 의도하고 있으며, 실제로 부정적 평가로 일관</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328</p>	<p>1970년대 공업화 정책에 따라 농수산업은 더욱 침체되었다. 당시 중화학공업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공해 등의 문제로 선진국에서 쇠퇴하는 분야였다. 또한, 각종 기계나 기술은 일본에서 도입하고, 공장을 일본 자본으로 건설함에 따라 한국 경제는 자본과 기술에서 미국뿐 아니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커져 갔다.</p>	<p>공업의 발달이 농수산업의 침체를 불러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일 경제의존도가 높아졌음을 비판하면서 70년대의 경제성과를 폄하</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329</p>	<p>[재벌의 성장] <자료 1> 재벌의 경제 집중도, 제조업 부문 재벌기업 주가가치 성장률, 재벌의 규모와 소유 구조 <자료 3> 문어발식 경영</p>	<p>재벌에 대한 비판 목적을 위해 1980년 자료와 1993년 자료를 활용하여 억지로 맞추고 있으며, 反재벌 의식 조장</p>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334	새마을운동은 겉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이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주도하였다. 이 때문에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과는 달리,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외면하고 장기집권용으로 왜곡 평가
------------------------------	-------------------------------------------------------------------------------------	---------------------------------------------------------------------------

4. 특정 정치지도자에 대한 편파적 평가

출 처	원 문	문 제 점
정치 (지학사) p. 222	[(탐구) 다수결은 만능인가?] 히틀러가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실시했던 여러 번의 국민투표도 국민투표의 위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략) 그는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선동 정치로 의회주의를 무너뜨리고 독재정치를 구축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도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로 영구 집권 구도를 정착시켰다.	박정희 대통령을 히틀러와 동일시하여 극악무도한 독재자로 묘사
정치 (대한교과서) p. 22	나는 대학 신입생 면접 때마다 존경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다. (중략) 간혹, 역대 대통령 중에서 누가 좋아하는가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없다는 대답이 다수이고 일부는 박정희 대통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 중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경제발전을 통한 민주주의 토대 구축이라는 업적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와 개발독재를 통한 민주주의 억압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음.

	<p>령이라고 대답한다. (중략)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의 ‘잘살게 해 주었다’는 이유는 극히 단순히 세간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자신이 박정희와 그의 시대에 대해 자료를 접하고 생각을 한 다음 내린 결론이 아니므로 별로 의미심장하지 않다.</p>	<p>그런데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폄하하는 내용의 대학교수 기고문을 예문으로 제시함으로써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하지 않고 있음</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55</p>	<p><인물엿보기> 좌우합작을 추진한 여운형과 김규식</p>	<p>건준과 좌우합작운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여운형을 중심으로 건국사를 서술</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66</p>	<p>그러나 행정부나 경찰 곳곳의 주요 자리에 친일 행위를 한 인물들을 등용하고 있던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의 처벌에 소극적이었다.</p>	<p>친일파 처리 문제를 중심으로 이승만을 평가함으로써 이대통령의 농지개혁, 교육개혁 등의 성과를 전혀 평가하지 않음</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300</p>	<p>[김일성 1인체제의 확립] ... 이들은 반김일성 세력을 모아서 1956년 8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 개인숭배를 비판하였다(8월 종파사건).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라는 이념적 명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던 김일성측은 세력분포의 우위를 토대로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반대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숙청에 나섰다. 그 결과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p>	<p>사회주의 국가건설의 이념적 명분과 인민대중의 지지를 김일성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시각을 그대로 수용</p>

<p>한국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 p. 343</p>	<p>한편, 경제성장의 결과 늘어난 중산층과 근로자는 박정희 정부의 개발독재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점차 민주화를 열망하게 되었다.</p>	<p>박정희 정부의 산업화 성과를 폄하</p>
---------------------------------------	---------------------------------------------------------------------------------	---------------------------

5. 민중사관(분열, 투쟁, 혁명 등)의 역사 기술

출 처	원 문	문 제 점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46</p>	<p>미국 역사가가 쓴 제너럴 셔먼호 사건</p>	<p>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설명하면서 많은 1차 자료들을 외면한 채 수정주의 학자인 브루스 커밍스의 2차 자료를 인용함으로써 집필자의 의도에 필요한 자료를 꺾어 맞추고 있음</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72</p>	<p><역사의 현장> 명성황후 ‘시해보고서’ 발견되다. “오전 5시경 궁궐 서쪽에서 총소리가 들려 급히 가보니 일본 낭인들이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왕비가 복도를 따라 도망가자, 일본 낭인들이 쫓아가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가슴을 세 번 짓밟고 칼로 가슴을 난자했다. 몇 분 후 시신을 소나무 숲으로 끌고 갔으며 그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러시아 건축가 세르진 사바틴의 수기 중)</p>	<p>민비의 시해를 생생하게 묘사하여 反日을 자극하려는 의도에서 사료 왜곡. 실제 사료는 “당일 새벽 6시 궁궐을 떠났으므로 왕비의 시해장면을 나는 보지 못했다. 적어도 내가 떠나기 이전까지 왕비는 아직 죽지 않았다.”</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p. 76~101</p>	<p>제2단원. 근대사회의 전개 3장. 구국민족운동의 전개 주제1.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주제2. 대한제국과 독립협회의 활동 주제3. 항일의병전쟁의 전개 주제4. 애국계몽운동의 전개 역사찾기. 동학농민운동의 발자취를 찾아서</p>	<p><주제1>동학농민운동과 <주제3>항일의병전쟁 부분에 지나치게 편중하여 다루고 있으며, 특히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역사찾기>란 항목을 통해 사진 전시와 동학운동의 기행로를 마련하여 과대평가</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323</p>	<p><자료 2> 농지개혁을 둘러싼 농민과 지주의 입장</p>	<p>내용은 물론이고 농민과 지주의 캐리커처를 넣어 상반된 이미지를 부각시킴</p>
<p>한국 근현대사 (두산) p. 12</p>	<p>한편, 조선후기의 사회 경제적인 변동 속에서 각성한 민중들은 사회의 변화를 갈망하며 양반 관리들의 압제와 수탈에 항거하였다. [<읽기 자료> 「동경대전」의 포덕문에 나타난 동학의 서양관] (중략) 서양인은 싸워서 이기고 빼앗아 뜻대로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 그리하여 온 동양이 다 망해 버린다면 (중략)</p>	<p>민중적·투쟁적 역사관 고취</p>
<p>한국 근현대사 (두산) p. 26</p>	<p>[제국주의 시대의 전개] ... 19세기 후반에는 자본주의가 급속한 발달을 이루어 독점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에 도달하였다... 이처럼 독점적 자본주의와 침략적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열강들이 1870년대부터 경쟁적으로 후진지역을 침략하여 식민지화해가면서 이른바 제국주의 시대가 전개되었다.</p>	<p>마르크스주의 역사관의 적용을 통하여 反제국주의 의식 고취</p>

<p>한국 근현대사 (두산) pp. 65~70, pp. 88~89</p>	<p>[3. 구국운동의 전개] 1) 동학농민운동의 전개(pp. 65~70) 역사현장 탐방: 동학농민운동의 유적지를 찾아서</p>	<p>동학농민운동이 구국운동의 대부분이라 할 정도로 과대 할애 및 평가</p>
<p>한국 근현대사 (두산) pp. 202~203</p>	<p>[4. 사회·경제적 민족운동] 1) 사회적 민족운동의 전개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p>	<p>일제강점기하에서 사회·경제적 민족운동 중 ‘사회 적 민족운동의 전개’를 시작하면서 ‘사회주의 사상 의 유입’을 첫 번째로 소개하며 강조</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62</p>	<p>단독정부 수립에 대해 가장 격렬한 반대 투쟁이 일 어난 곳은 제주도였다. 1948년 4월 3일 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미군의 즉시 철수 등을 주장하는 제주 도의 공산주의자와 일부 주민들은 무장 봉기하여 도내의 관공서와 경찰지서를 습격하였다.</p>	<p>제주 4.3 사건의 동기가 단정 반대와 미군 철수라는 주장은 사실의 왜곡일 뿐 아니라 좌파의 투쟁을 정 당화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음</p>
<p>한국 근현대사 (두산) pp. 273~274</p>	<p>4) 6·25 전쟁 제주도 4·3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p>	<p>제주도 4·3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을 6·25 전쟁 선상에서 제시하고 설명하여 이 사건들이 6·25 전쟁 의 직접 원인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보는 수정주의 역사관 적용</p>

6. 북한체제에 대한 우호적·중립적 평가

출 처	원 문	문 제 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8	북한 사회 또한 우리 민족이 살아온 삶의 터전이다. 북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회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다만 남한과 달리 사회주의의 길을 갔을 뿐이다. 이 때문에 남북한 사람들 사이에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법을 채택하여 북한의 현실과 사회주의에 대한 중립적 평가를 하고 있음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9	[남북한 헌법 비교] <자료 1> 대한민국 헌법 전문 <자료 2>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서문 빼고 소개) <과제 1> 다음은 남북한 헌법을 비교한 도표이다 자료1과 2를 보고 빈칸을 채워보자.	<자료 2>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의 전문을 게재하지 않고 바로 조항을 소개함으로써 북한헌법(김일성 헌법)의 수령절대주의적 속성과 반민주·반인륜성을 은폐, 또 <과제 1>의 도표를 채워 넣는 질문은 북한헌법의 문제점을 숨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헌법이 더 민주적인 것으로 오해 소지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65	[북한에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서다]	북한 정부는 ‘민주개혁’이란 미명아래 일제 식민잔재를 청산하고 민중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우호적·중립적 평가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72	전쟁 초 승리를 거둔 북한군은 점령 지역에서 토지 개혁이나 노동 법령의 개정과 같은 북한식 개혁을 하면서 지주나 공무원 등에 대한 숙청을 감행하였다.	북한이 개혁을 잘 한 것으로 평가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72</p>	<p>민간인 학살도 곳곳에서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난 직후 남한에서는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이 있었고, 경남 거창과 충북 영동의 노근리 등 여러 곳에서 주민들이 적으로 내몰려 죽임을 당했다. 후퇴하는 북한군도 대전 등지에서 많은 주민을 죽였다.</p>	<p>민간인 학살의 주범이었던 보도연맹원들의 처형을 부당한 민간인 학살로 묘사하면서 남한 군경의 민간인 학살을 구체적으로 부각한 반면, 북한군의 만행은 간략히 언급</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p. 298~307</p>	<p>[북한의 변화와 평화통일의 과제]</p>	<p>다른 교과서들은 제목을 [통일정책과 평화통일의 과제]로 달았으나, 금성교과서만은 ‘통일정책’ 대신 ‘북한의 변화’라 함으로써, 북한을 우호적·내재적 관점에서 보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는 남한 역사에 대한 평가는 편향적·부정적으로 하는 반면, 북한 역사에 대한 평가는 회피하면서 사실의 기술에만 그침</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99</p>	<p>[<자료 3> 북한 청소년의 희망] (북한의 생활에 대해 쓴 책을 참고로 북한 청소년의 희망을 재구성)</p>	<p>북한의 생활에 관한 책이 어떤 책인지 출처도 밝히지 않고 친북적 의도에 따라 자료를 발췌 활용하여 북한에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는 인상을 주어 왜곡</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301</p>	<p>[천리마운동] (중략)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전반에 걸쳐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생략)</p>	<p>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며, 남한의 새마을 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달리 친북 편향성을 보임</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302</p>	<p>[한걸음 다가서기: 북한 방문자들이 말하는 주체사상]</p>	<p>루이제 린저의 ‘북한이야기’는 친북 편향이 극심한 인물의 저작으로 자료로 활용하기에 부적당</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306</p>	<p>[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제창]</p>	<p>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바르게 계승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쪽이 북한임을 암시</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322</p>	<p>[한 걸음 더 다가서기: 북한의 토지개혁] 토지개혁의 결과, 북한에서는 지주가 사라졌으며, 빈농이 줄어들고 中農이 농민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반면, 토지를 빼앗긴 지주들은 북한정권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월남을 하는 경우도 늘어났다.</p>	<p>남북한 토지개혁의 비교를 통해 남한은 부정적으로 북한의 개혁은 긍정적으로 평가</p>
<p>한국 근현대사 (대한교과서) pp. 284~285</p>	<p>[6·25 전쟁 이후 북한의 변화] 북한 체제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김일성 유일지배 체제 형성, 김정일의 권력 계승을 다룬 이후 곧바로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이질성과 동질성을 다루고 있음.</p>	<p>북한 체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권력 세습을 다룬 후 곧바로 문화적 이질성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써 북한체제에 대한 내재적·중립적 접근</p>
<p>한국 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 pp. 322~323</p>	<p>[북한의 새로운 움직임]</p>	<p>북한사회가 경제, 정치, 대외관계 등에 있어 새로운 개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지만, 본 단원이 ‘현대사회의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 통일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볼 때, 한국사회에 대한 평가와 북한사회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p>

7. 통일지상주의의 확산 및 자유민주적 통일 회피

출 처	원 문	문 제 점
정치 (지학사) p. 238	[남한의 공화국 연합제 통일방안] 남한의 통일방안은 공화국 연합→연방제→완전통일의 3단계 통일방안이다.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남북 화해·협력→남북연합→완전통일)을 소개하지 않고,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을 소개하고 있음
정치 (천재교육) p. 266	우리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이라는 통일의 기본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남북간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상호 공존과 협력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통일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대내적인 차원에서 통일의 필요성 및 구현방법, 통일 이후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중략) 둘째, 대 북한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 확대를 통해 남북한 상호 이해 증진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이루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중략) 마지막으로, 대외적 차원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나, 교과서 내용에는 이러한 통일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통일 한국의 국가 체제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음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63</p>	<p><자료1> 이승만의 정읍 발언 <자료2>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과제1> 당시 단독정부의 구성에 찬성한 세력과 반대한 세력을 조사해보자. <과제2> 자료1과 2를 읽고, 이승만과 김구의 입장에서 하나를 택하여 당시 단독정부 구성이 필요했는지, 또는 통일정부 구성이 가능했는지를 토론해보자.</p>	<p>당시의 국제정세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객관적 분석 없이 이승만을 분단세력으로 폄하하면서 통일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있음</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308</p>	<p>휴전 이후 이승만 정부는 북한과 대화나 타협을 시도하지 않은 채 철저한 반공·반북 정책을 고수하였다. 별다른 통일정책이나 통일방안이 없이 남북 자유 총선거를 내세우는 정도였다. 조봉암과 진보당 등 일부 진보세력이 평화통일론을 주장하였으나, 정부의 탄압으로 확산되지 못했다.</p>	<p>남한이 분단 고착화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통일 노력이 없었음을 강조</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310</p>	<p>북한은 4.19혁명 직후부터 남북한의 통합을 목표로 하지만, 당분간 남북한의 정치체제를 그대로 두자는 과도적 연방 제안을 내세웠다. 1970년대 들어서 는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 연방의 이름을 ‘고려연방 공화국’이라고 구체화하였다. 북한은 남북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인 정치, 군사문제를 우선적인 논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남한의 통일방안이 분단체제를 고착화한다고 비판하였다.</p>	<p>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비해, 남한의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비중을 두지 않음</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p. 312~313</p>	<p>[통일운동의 성장]과 [통일론의 전개]</p>	<p>재야운동권의 통일방안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 통일지상주의로 흐르고 있음</p>

8. 반미주의 및 친중적 인식

출 처	원 문	문 제 점
정치 (지학사) p. 161	<p>[(탐구) 국제사회의 양면성] <자료 1> 파나마의 독재자 노리에가 (중략) 미국 정부는 1989년 12월 파나마를 침공하여 그를 체포하고, 미국 법정에 세워 유죄 판결을 내렸다.</p>	<p>미국이 국제연합이나 국제사회의 규범보다는 힘을 앞세워 파나마를 침공하여, 노리에가를 체포하고 자국의 법으로 심판한 것을 사례로 제시하여 미국이 군사력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내정간섭을 하는 국가로 묘사하고 있음</p>
정치 (대한교과서) p. 193	<p>미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테러 사태의 보복 조치로 이루어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연합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구호하기 위해 미국에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습으로 아프가니스탄 내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난민을 포함해 750만 명이 아사상태에 놓일 것을 우려해 국제 연합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이다. (중략) 러시아와 중국도 상하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미국의 공격중단을 촉구하였다. (중략) 이슬람 국가들도 57개 국가 대표들이 모인 이슬람회의기구(OIC)에서 (중략) 미국의 공격 중단 및 평화적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p>	<p>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의 근본 원인이 되었던 테러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없이, 미국이 ‘보복’ 전쟁을 감행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와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미국을 호전적 국가로만 묘사함으로써 반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p>

<p>정치 (지학사) p. 234</p>	<p>[(탐구) 6·15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4강대국의 입장]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나, 자국의 영향력은 축소될 것으로 판단하여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p>	<p>미국이 6·15 정상회담에 대해 자국의 이익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왜곡 설명하여 미국을 반통일 국가로 매도</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50</p>	<p>[모택동 사진] “중국은 소련 및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국가의 기틀을 다지기에 힘썼다... 나라의 기반이 다져지면서...”</p>	<p>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우리의 현대사의 시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다루어 전반적으로 친중적 역사 기술을 하고 있음</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p. 254 ~ 255</p>	<p>그렇지만 농민과 노동자의 이와 같은 활동은 이후 미군정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p.254) 그러나 미군정은 한국인들이 만든 모든 행정기구와 그 활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255)</p>	<p>미군정이 새로운 국가 건설의 장애임을 의도적으로 강조</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56</p>	<p><역사의 현장> 일장기 내려진 자리에 성조기가 올라가다. (중략)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은 자주독립을 위한 시련의 출발점이기도 하였다.</p>	<p>일본이 미국으로만 바뀌었을 뿐, 식민 지배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음을 암시하면서 특히 反美를 의도</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56</p>	<p>남쪽에 주둔한 미군은 자신들이 실시하는 군정만이 유일한 정부임을 거듭 확인하였다. 그러면서 미군정청에 필요한 한국인 관리는 주로 한국민주당 계열의 인물로 채웠다. 한편, 소련군은 북한주민들이 세운 건국주민위원회를 대부분 인정하였다. 그리고 함께 들어온 김일성이 북한에서 실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였다.</p>	<p>남쪽은 친일파로 북쪽은 인민들에 의해 정권이 수립되었던 것으로 암시하면서, 미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면 소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여 반미·친소적 입장 표출</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57</p>	<p><과제1> 미군정은 한국인의 자치적인 행정과 치안 활동을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일제하에서 일했던 친일관리들을 계속 채용하였다.</p>	<p>미군정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반미를 유도</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57</p>	<p>[남북에 들어온 미군과 소련군] <자료1>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포고령 1호 - 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한다. <자료2>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포고문 조선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여러분의 수중에 있다. 여러분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붉은 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만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았다.</p>	<p>미군과 소련군 사령관의 포고문을 의도적으로 대비시켜 미군은 점령군으로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남북한에 들어온 것으로 인식시켜 반미·친소를 의도적으로 유도</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269</p>	<p><자료 2> 소련과 중국의 북한 지원 <자료 3> 애치슨 선언</p>	<p>중국과 소련은 북한을 지원했지만, 미국은 남한 방위를 책임지지 않은 것으로 예시하여 반미 의도를 보임</p>

<p>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 325</p>	<p>미국의 농산물 원조는 생산 과잉으로 자국 내에서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정치자금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필요 이상으로 들여왔다. 이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져 농가 소득이 낮아지고 농민의 생산의욕도 줄어들었다. 또한, 미국의 값싼 잉여농산물이 공업의 원료로 사용됨으로써, 국내의 밀이나 면화 생산은 커다란 타격을 받고 점차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p>	<p>NL 운동권의 경제이론을 수용, 반미 논조</p>
<p>한국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 p. 291</p>	<p>그 밖에도 6.25 전쟁을 계기로 유엔군의 참전, 미국의 경제원조와 함께 서구문화가 밀려들어와 우리 사회와 문화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일부 국민들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업신여기고 미국의 문화를 맹목적으로 숭상함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생활풍속이 크게 바뀌어 갔다.</p>	<p>전쟁을 통해 서구문화의 유입에 가속도가 붙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서구문화의 수입은 이미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되었음. 또한 미국문화가 전쟁을 통해 수입되어 전통문화의 발전을 해쳤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결국 이 글을 통해 청소년들은 미국이 6.25 전쟁에 참전하여 한국을 도와주었다는 인식보다는, 소수의 한국인들과 함께 한국 전통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할을 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등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음</p>

9. 反시장

출 처	원 문	문 제 점
<p>경제 (교학사) p. 31</p>	<p>[탐구활동: 개발독재와 경제 체제] 개발 독재란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독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전대통령이 집권했던 1961년에서 1979년의 기간은 개발 독재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런 기술이나 자본이 없는 후진국에서 경제 개발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주도가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경제 개발은 정경 유착, 부정부패, 노동자의 인권 탄압, 경제력 집중, 소득 격차 등 많은 문제를 낳기도 한다.</p>	<p>후진국들에서 실패로 끝난 ‘개발독재’와 구별 없이 우리나라의 발전사를 왜곡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기적"이라 불리는 것은 시장의 메커니즘이 깊숙이 작용하였음을 반증하고 있음. 또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지나치게 부각시킴</p>
<p>경제 (천재교육) p. 144</p>	<p>부와 소득의 편재 현상을 설명하는 ‘80대 20 법칙’이 현대 사회에서 설득력을 갖는 것은 소비의 양극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인구 1.6%가 국민 총 소비의 25%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80대 20 사회’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하더라도 소득 불평등에 따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병리학적이다.</p>	<p>명확하지 않은 개념으로 시장을 비판하는 좌파적 주장을 여과 없이 기술하고 있음. 80대 20사회가 신자유주의의 필연적 결과라고 단정하고 이를 병리학적이라고까지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우려가 많음</p>

<p>경제 (천재교육) p. 131</p>	<p>자본주의 생산 양식은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 비용의 최소화와 대량 생산으로 생산 단가를 인하시켜 소비의 대량화를 야기시킨다. 기업은 대량 생산된 상품의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상품 선전을 강화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품 선전에 현혹되어 바로 쓰고 버리는 생활에 익숙하게 된다.</p>	<p>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과잉 생산과 소비자 현혹은 마르크스 경제학 진영의 전형적인 논리임. 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무시하고 있음. 소비자 현혹과 일회성 소비에 대한 논리적 근거 없이 기술되어 있음</p>
<p>경제 (천재교육) p. 13</p>	<p>서양의 자본주의 경제가 200년의 역사 속에서도 타락하지 않고 찬란한 물질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청교도적 생활 철학이 물질 만능으로 흐르기 쉬운 자본주의 경제를 순화시키고 여과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후진 국가 사회는 경제적 파탄과 혼란, 그리고 계층 간의 대립을 겪고 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건전한 윤리 의식이 밀받침되지 않은 채 제도로서의 시장 경제를 물질 만능으로 잘못 이해하고 운용하기 때문이다.</p>	<p>시장경제질서와 청교도적 생활철학과 혼돈하여 기술하고 있음. 시장경제하에서는 경제주체들은 합리적 경제활동을 하고 그 결과 경제주체들의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동시에 극대화 됨. 경제문제를 윤리문제와 결부시키게 되면 시장경제 자체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됨</p>
<p>경제 (두산) p. 26</p>	<p>경제적 대가를 어려움 없이 지불할 능력을 갖춘 소수의 부자들이 그 생산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수의 빈곤층이 이용할 수도 있다. (중략)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반면 북한이나 쿠바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똑같이 분배된다.</p>	<p>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곤층이라는 두개의 계층으로 나누는 것은 전형적인 좌파적 구분임. 또한 세계에서 최빈국에 속하는 북한과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똑같이 분배된다”고 기술한 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패한 좌파 이념을 미화시킬 우려가 있음</p>

<p>생활경제 (대한교과서) p. 75</p>	<p>과소비는 개인의 가정경제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의 성장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다. 다음으로 외국 상품의 소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중략) 그런데 외국 상품의 브랜드에 밀려 가격과 품질이 뒤지지 않는 국산품이 판매되지 않는다면, (중략)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가는 자유이지만,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고려하는 슬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p>	<p>에매한 과소비의 개념을 도입하여 소비의 폐해를 지나치게 강조함. 국가경제를 위해서 국산품을 사도록 요구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경제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효성 또한 없음</p>
<p>생활경제 (대한교과서) p. 134</p>	<p>요즈음 음식점에서 가족끼리 오붓하게 외식을 즐기는 모습이 흔히 눈에 띄는데, 단란한 가정과 생활의 여유를 보여 주는 흐뭇한 광경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들에게서 또 다른 일면, 우리도 이제 이 정도의 외식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왕성한 소비 욕구 이외에도 자기 가족 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가 엿보인다. 굶주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웃에 있어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와 내 가족만 마음껏 먹고 분에 넘게 써도 된다는 태도는 윤리적으로 병든 상태이다. 사치와 낭비가 이기적이며 도덕적인 타락인 데 비해서, 근검절약과 절제, 금욕 등은 그 자체가 도덕적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다.</p>	<p>가족들끼리 외식하는 것조차 부정적으로 묘사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있음. 소비에 있어 청교도적 윤리관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非 경제적 논리로 소비의 기능을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음</p>
<p>경제 (교학사) p. 33</p>	<p>그러나 시장 경제 체제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계획 경제체제보다 우월하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체제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시장에서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지나친 이기주의로 인해 구성원 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 파괴나 오염과 같이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공익을 침해하는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이다.</p>	<p>시장경제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음. 또한 환경 파괴 원인에 대해서도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음. 환경부하는 개인의 이익추구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나 사회 전체 공익의 추구과정에서도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환경부하가 발생함. 환경부하의 발생에 대한 개념 없이 시장경제의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환경 파괴를 들고 있음</p>

<p>경제 (두산) p. 126</p>	<p>[탐구활동 : 공기업의 민영화, 항상 바람직한 것인가?] 다음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의견들이다. (가) 4,358명의 교통부 직원을 57명으로 줄였다는 뉴질랜드 정부의 개혁 소문이 내게는 끔찍한 괴담처럼 들렸다. 공무원을 줄이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줄게 된다. (중략) 예를 들어 버스 노선 중 적자 노선은 즉각 폐지될 것이다. 그렇다면 산골 오지의 버스 통학생은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가?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만이 불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아니다. 일례로 스웨덴 정부는 경쟁력을 잃은 조선 공업을 살리기 위해 1977-79년 사이에 조선공업 근로자 전체 임금의 120%를 업계에 보조금으로 주었으며, 정부 고용을 늘려 1987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약 33%를 정부 부문에서 흡수하였다. (후략) 자료: OO신문, 2001. 7.7.</p>	<p>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해 편향적으로 비판하고 있음. 공기업 민영화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정황 설명과 추측을 포함하는 부적절한 예시를 통해 민영화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음. 민영화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대안으로 해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문제만을 강조하고 있음</p>
-------------------------------	----------------------------------------------------------------------------------------------------------------------------------------------------------------------------------------------------------------------------------------------------------------------------------------------------------------------------------------------------------------------------------------------------------------------------------------------------	-----------------------------------------------------------------------------------------------------------------------------------------------------------------------------------------------------------------------

10. 反기업

출 처	원 문	문 제 점
경제 (두산) p. 134	<p>여섯째, 소유자 중심 체제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변화를 꾀하는 기업만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사업 영역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 중심의 의사 결정 구조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 경영인에 의한 관리 체제로의 과감한 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p>	<p>기업소유구조에 대해 왜곡하고 있음. 기업은 반드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야만 가장 좋은 것처럼 서술되어 있으나 검증된 사실이 아님.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각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야 하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하라는 것은 명백한 경영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음</p>
경제 (두산) p. 136	<p>둘째,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책임이다. 기업은 단순히 생산 활동을 통한 고용창출이나 재화와 용역의 생산 증대 등에 머무르지 않고, 근로자에게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물론 주주들에게도 적정 수준의 이익이 배당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기업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책임이다. 국내외 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 기업의 재무 건전성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 경영자는 기업 경영의 투명화에 앞장서야 한다. 넷째,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한편으로 공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와 자연 환</p>	<p>기업의 활동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없이 기업의 과도한 책임성과 윤리성만을 강조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기업은 경제주체의 하나로써 재화를 생산하여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시장에 기여함. 재화의 생산과정, 유통과정, 소비과정, 폐기과정 등에서 사회 공공재 공급의 기본이 되는 세금을 발생시키고, 개인에게 일자리와 편익을 제공함</p>

	<p>경의 훼손, 자연 자원의 고갈, 자원 배분의 왜곡, 빈부의 격차 등과 같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업은 생산 참여자들의 인간적 가치 실현에도 노력해야 한다. 기업의 이윤 창출은 생산 활동 참여자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만일 기업이 이윤 추구에만 급급한 나머지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을 합리적이며 정당하게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면, 기업 자체는 물론 나라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p>	
<p>경제 (두산) p. 137</p>	<p>한편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업은 한 경제 사회 안의 소비자, 근로자, 다른 기업, 정부 등과 밀접한 상호 의존 관계를 맺으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를 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은 육성 사업을 통한 인재 육성, 의료 사업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문화 사업을 통한 문화발전, 사회 복지 사업을 통한 사회 보장의 증진, 장학 사업을 통한 교육 수혜 제공, 체육·레저 사업을 통한 여가 선용 기회의 확대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p>	<p>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음. 기업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기업의 의무 활동처럼 기술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 활동 속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임. 시장을 무시한 인위적인 의무부과는 자칫 기업 경쟁력 약화를 불러 일으켜 사회전체로 보아서는 손해가 될 수 있음. 기업은 기본적으로 재화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p>
<p>경제 (교학사) p. 120</p>	<p>원만한 노사 관계를 위한 첫걸음은 우선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서로에 대한 대립적 의식부터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서로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노사 관계에서 협력적 노사 관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의 의식 전환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은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p>	<p>기업의 노사관계를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음. 이미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시대는 아님. 기업의 일차적인 경영 목표가 이윤임을 생각할 때 피고용자와 고용자의 관계는 기업의 경영목표를 성취해가는 동반자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음</p>

	있는 단순한 종업원으로 간주하고 대우하기보다는 기업의 경영 목표를 성취해 가는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생활경제 (대한교과서, 이재웅 외) p. 43	그런데 상업적 정보는 상품의 선택 기준이나 상품 이용 방법 등 소비자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보다는 판매 중심 정보가 대부분이므로 객관성이 결여되어있고, 정보 내용이 과장되어 있거나 허위인 경우가 많다.	기업을 신용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허위 과장 광고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음에도 상업적 정보가 객관성이 떨어지고 허위라고 규정함. 상업적 정보가 정확하고 자세한 경우가 많은 정보화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임
경제 (천재교육) p. 16	과연 환경과 개발은 양립할 수 있는가? 개발에 찬성하는 측은 환경과 개발이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증가하는 인구의 삶의 질을 일정수준 유지하기 위해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경과 개발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환경과 개발의 양립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환경 친화적 개발이 보여준 허구를 지적한다. 환경 친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사실상 개발을 정당화하고 결국은 환경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환경과 개발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되어있지 않은 채 결국은 환경파괴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개발이 나쁘다고 서술하고 있음. 인간중심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개발이 불가피함. 환경만을 택할 수도, 개발만을 택할 수도 없는 현실에 있어서 환경과 개발이 양립된, 지속 가능한 개발만이 대안임
경제 (교학사) p. 84	외부효과의 출현은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서로 충돌시킨다는 점에서는 다른 유형의 시장의 실패와 다를 것이 없다. 즉, 대기 오염 물질을 몰래 배출하는 기업은 오염 물질의 정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이득을 보겠지만, 그로 인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공익과 사익이 서로 충돌되는 것은 시장의 실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시장의 실패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음. 외부효과는 시장경제원리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 기업이 법을 어기면서 몰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시장실패보다는 법률위반을 방관하는 정부실패라고 볼 수 있음

11. 反세계화

출 처	원 문	문 제 점
<p>생활경제 (대한교과서) pp. 34~35</p>	<p>국제화와 개방화의 진전은 사람들의 소비의식과 소비문화에 대한 방향 감각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내 시장의 개방에 따른 외국상품의 범람은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산업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고, 지나친 전시적인 소비는 사치와 향락 및 과소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p>	<p>개방화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고 있으며, 경제 원리와 관계없는 내용임. 국제화와 개방화가 사치와 향락 및 과소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를 경계하자는 윤리 추구적 내용에 가까움</p>
<p>경제 (두산) p. 21</p>	<p>세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각양각색이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세계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세계화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의 생활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본다. 첫째, 현대인들은 삶의 질 향상을 삶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는 그 수단에 불과한데, 지금은 수단이 목적을 희생시키고 있다. 둘째, 노동자들은 창조와 진보의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 혁신의 객체로 전락하였다. 셋째, 범지구적인 무한경쟁은 자연과 인간의 파괴적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다른 하나의 목소리는 세계화 자체에는 동의하나 그 방향에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의 세계화가 인터넷, 컴퓨터, 이동통신, 인공위성 등과 같은 것들에 이끌려 지나치게 기술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세계화가 거대기업과 각국 정부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지구적 발전, 가난한 나라에 대한 지원, 극빈자 구제 등에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p>	<p>편향된 반대 주장을 여과 없이 소개하고 있음. 세계화(국경을 넘는 경쟁)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로 설명 가능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범지구적 무한 경쟁이 파괴적 경쟁을 부추긴다는 근거 없는, 편향적인 서술을 하고 있음. 경제 원리에 위배되는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했을 경우,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수용에 있어서 비논리적 잣대로 받아들일 수 있음. 세계화의 장단점 역시 경제 원리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함</p>

	<p>자료 : ○○일보, 반세계화의 두 목소리, 2001. 7. 23.</p> <p>1) 윗글에 제시된 두 가지 세계화 반대 논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p> <p>2)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세계화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 근거는 무엇인가?</p>	
<p>경제 (두산) p. 132</p>	<p>그렇다면 세계화가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렇지 않다. 국내의 약소 기업은 무한 경쟁에 부딪힘과 동시에 정부의 보호나 지원도 받을 수 없어 도산하게 된다. (중략) 그런데 세계화가 낳는 더 큰 어려움은 국내의 빈곤 문제나 실업 문제, 그리고 지역적 불균등 발전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기업이 좀 더 큰 이익을 찾아 자유롭게 이동하고 각국 정부가 이러한 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하지 못한다면, 어느 나라에는 빈곤이 심화되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p>	<p>세계화의 역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음. 중소기업 도산이나 실업 및 빈곤문제를 세계화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임. 우리의 경제발전과정을 보면 실업과 빈곤문제는 지속적인 높은 경제성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음. 세계화는 어느 국가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p>
<p>경제 (천재교육) pp. 130~131</p>	<p>수입 상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경우, 외국 상품의 수입 증대로 인해 외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환율의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 환율의 상승은 곧 수입 원자재 수입에 영향을 미쳐 국내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고 결국 물가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산 상품의 가격 경쟁력마저 떨어뜨려 국제 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중략) 가계는 수입의 증가를 피하는 동시에 지출의 감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p>	<p>수입상품에 대해 부정적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음. 국제경쟁 사회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국산품 애용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은 국익을 해침. 수입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국제화 시대에 걸맞지 않음. 또한 소비에 대한 긍정적 측면은 간과된 채 저축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물경제에 있어서 소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p>

12. 기 타

출 처	원 문	문 제 점
<p>정치 (지학사) p. 86</p>	<p>지하철 노조는 왜 파업을 했던 것일까? 근무조건 개선, 복지 향상, 임금 인상 등을 사용자 측에 요구하였으나, 사용자 측이 들어주지 않아 그랬을 수도 있다.</p>	<p>공익적 일을 담당하는 지하철 노조의 파업의 원인을 사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서라는 측면만을 강조, 지하철 노조의 파업의 부당성 부분이 간과</p>
<p>정치 (지학사) p. 101</p>	<p>[[탐구] 대중매체는 여론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료 1> 매카시즘과 언론 (중략) 에드워드 머로우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매카시즘의 허위를 하나 하나 벗기면서 매카시의 기세는 꺾였다. 머로우는 매카시즘의 광기가 미국을 반이성의 시대로 몰아넣지 않도록 미국 국민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2> 평화의 댐의 진실. 북한의 금강산댐은 당시 정부의 발표보다 훨씬 작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p>	<p>대중매체의 역할을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그 예로서 안보 관련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진보적 성향의 매체가 더 진실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조장하고 있음</p>

Ⅱ. 중등 교과서의 문제점 분석

1. 자유민주주의관의 왜곡 및 훼손

출 처	원 문	문 제 점
사회 2 (중앙교육진흥연) p. 69	노동자들 대부분은 도시의 빈민굴에서 집단생활을 하였다. 그에 반해 자본가들은 더욱 더 부자가 되어 예전 귀족들의 화려한 생활에 못지않은 생활을 누렸다.	산업혁명 이후 물질적 풍요를 강조하기보다, 노동자의 비참한 삶을 묘사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이어지는 내용으로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본문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산업혁명의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공산주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사회 2 (성지문화사) p. 61	노동자 문제와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이 힘을 얻었다. 마르크스를 비롯한 여러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사유 재산 제도를 비판하고 빈부 차이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이상으로 생각하였다.	산업혁명 초기 노동자 문제를 설명하면서, 그 대안으로 사회주의만을 설명함으로써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을 심어줄 수 있음
사회 2 (중앙교육진흥연) p. 111	레닌의 뒤를 이은 스탈린은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공업과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소련은 공산당 정부의 강력한 독재 아래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었다.	소련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가 소련의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서술하고 있음. 공산당 등장 이후 단기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점차 계획경제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소련 경제가 낙후되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p>사회 2 (교학사) p. 123</p>	<p>우리나라에서도 인권 보장을 위한 법을 만들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다가 범죄자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을 풀어주는 등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차별받고 고통을 겪는 이웃들이 적지 않다.</p>	<p>양심수 석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아직도 차별받고 고통 겪는 이웃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무의식적으로 지지하도록 함. 또한 인권은 여성의 지위 향상, 어린이 보호 등 다양한 조치가 있었는데, 유독 양심수 문제만 언급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보이는 것임</p>
<p>사회 2 (금성출판사) p. 109</p>	<p>(활동2)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정권, 러시아 혁명은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서 전제정치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p>	<p>공산주의 혁명에 의한 독재체제를 최초의 프롤레타리아정권 성립으로 묘사함으로써 실패로 판명난 사회주의 체제의 출발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p>
<p>사회 3 (교학사) p. 11</p>	<p>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 국가에서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 법이 만들어진다.</p>	<p>민주주의를 포폴리즘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참여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인 양 호도하고 있음</p>
<p>사회 3 (금성출판사) p. 31</p>	<p>그러나 최근,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각 정당의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고,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을 통한 정치참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단 <활동 10, 지지할 정당이 없다?> 00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79.9%에 달했다.</p>	<p>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의 정치 참여를 고무하여 참여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인 양 오해할 수 있게 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공화적(republic) 요소 경시</p>

<p>사회 3 (금성출판사) p. 110</p>	<p>[<자료 2> 여야 정쟁 격화] 근래의 우리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극심한 갈등과 대결의 구도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정쟁이 격화되면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 소추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여당은 ‘민주헌정 파괴 의도’라고 반발하는 등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oo일보, 2001.7.25.)</p>	<p>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p>
<p>사회 3 (금성출판사) p. 34</p>	<p>[생각넓히기, 시민단체가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 (중략) 그런데 2000년 총선시민연대는 “총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불법, 탈법 등 선거감시활동을 뛰어넘어 공천과 선거 과정에 우리의 의사를 직접 표현할 것이고 (중략) 시민단체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법원은 “낙선운동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실정법을 어긴 행동까지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p>	<p>시민단체의 불법적 활동을 참여민주주의의 명분으로 옹호하면서 법치주의를 경시할 우려</p>
<p>사회 3 (금성출판사) p. 38</p>	<p>[생각넓히기,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 현실을 바꾼다] (중략) L교수는 “새로운 권력은 이제 총구가 아닌 마우스 클릭에서 나온다”고 전망했다.</p>	<p>인터넷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익명에 의한 포퓰리즘 정치의 성행을 민주주의의 미래의 모습으로 오해하게 함</p>

<p>사회 3 (금성출판사) p. 50</p>	<p>...(중략)...생산 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와 그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생겨남으로써 시장경제체제를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성립되었다. [생각넓히기, 공장제 기계공업과 산업혁명] (중략) 공장은 자동 장치 체계에 의하여 운전되며, 노동자는 기계의 보조자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중략) 이와 같이 공장제 기계공업의 발전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확립, 발전시키는 동시에, 자본가 계급과 임금노동자 계급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2대 계급의 사회적 대립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다.</p>	<p>마르크스주의 사회역사관에서 경제발전을 조망함으로써 좌파적 시각을 확산시키고 있음</p>
<p>사회 3 (동화사) p. 13</p>	<p>[<그림4>국민참정권 원천봉쇄! 선거법 개정 규탄집회: 지역감정, 개악선거법, 부패정치, 음모론] [<그림3>시민들이 국민주권 실현을 외치며 일어섰던 5.18 민주화 운동]</p>	<p>과격한 구호와 투쟁적·혁명적 분위기 조성 및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사진 게재를 통해 법치적 민주주의보다는 투쟁적·참여적 민주주의관 고취</p>
<p>사회 3 (교학사) p. 85</p>	<p>[민중가 개사] 모둠별로 회의하여 가사를 바꿀 노래를 선정하고 재미있게 가사를 바꾸어 본다. 예시) 사노라면 원래의 가사 (1절) 사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p>	<p>노래 개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사회의 부조리를 확대, 의식화시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경시하고 투쟁의식 고취</p>

	<p>(2절)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대도 고운님과 함께라면 즐거웁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밀천인데, 찌찌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짹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p> <p>가사를 바꾼 상태</p> <p>(1절) 공급자는 언제라도 많은 이윤 노리지 같은 물건 팔다 보면 서로 싸움하더라.</p> <p>(2절) 수요자가 많이 오면 가격들은 오른다. 가격을 높게 팔면 많은 이윤 가능해 남들보다 많이 팔아 부자되려면, 제품 좋게 가격 낮게 이렇게 팔아라. 그러면 손님 왕창 그러면 손님 왕창</p>	
--	---------------------------------------------------------------------------------------------------------------------------------------------------------------------------------------------------------------------------------------------------------------------------------------------------------------------------------------------	--

2.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 부정

출 처	원 문	문 제 점
사회 3 (금성출판사) p. 192	(중략) 1945년 8월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분할 점령으로 시작된 분단은 (중략) 1946년에 북한이 토지개혁, 국유화 등의 조치를 본격화하면서 체제상의 분단으로 이어지고...	분단을 미·소의 군사적 분할 점령 탓으로 돌리는 외재론 입장을 전적으로 취함으로써 反제국주의 의식 고취 목적

3. 6.25 전쟁 성격의 왜곡

출 처	원 문	문 제 점
사회 2 (고려출판) p. 124	(도움자료)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분단 이후 냉전체제 아래서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불행을 겪었다. 이는 민족 내부의 분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전쟁이기도 하지만, 지난날 강대국의 식민지 침략이 남겨준 상처에다 미국과 소련의 새로운 개입과 간섭이 더해져 빚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전쟁을 민족 내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미·소의 개입을 전쟁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는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남침이었다는 점과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참전하게 된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 한국전쟁의 원인을 혼란케 함

4. 특정 정치지도자에 대한 편파적 평가

출 처	원 문	문 제 점
<p>사회 3 (중앙교육진흥연) p. 102</p>	<p>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장기 집권 끝에 4·19 혁명으로 물러나고, 새로 들어선 정부가 5·16 군사 정변으로 무너지는 등 우리사회는 계속해서 진통을 겪어야만 하였다.</p>	<p>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전혀 없고 장기집권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만 하고 있음</p>

5. 민중사관(분열, 투쟁, 혁명 등)의 역사 기술

출 처	원 문	문 제 점
<p>사회 3 (금성출판사) p. 97</p>	<p>[현대 사회의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중략) 특히 사회구성원들의 신념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왔다. 지난날 사람들은 불평등한 삶을 살면서도, 이를 운명으로 여기기도 했다. 또한 특정한 사고방식에 끌려 다니기도 했다. 그렇지만, 점차 잘못된 사회 제도나 가치들에 대해 저항하기 시작했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다.</p>	<p>갈등론적 사회관에 입각하여 투쟁의식 고취</p>
<p>사회 3 (금성출판사) p. 106</p>	<p>[권위주의 사회로부터 민주사회로!] <활동 4> 광복이후의 주요 사건의 장면들 6·25 전쟁(1950), 4·19 혁명(1960), 5·16 군사정변(1961), 유신반대운동(1970년대), 6월 민주항쟁(1987), 남북정상회담(2000)</p>	<p>편향된 현대사의 선정과 사진 배열을 통해 코드에 맞는 방향으로 민주화 운동을 정당화시킴</p>

6. 북한체제에 대한 우호적·중립적 평가

출 처	원 문	문 제 점
<p>사회 1 (두산) p. 100</p>	<p>[북한의 식량부족, 무엇이 문제인가?]</p>	<p>식량부족의 원인으로 집단화된 농업에 기인한 낮은 생산성을 첫째 이유로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화된 농업의 원인이 강압적 공산주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음. 이 문제는 여타 교과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집단화된 농업 또는 협동농장 등 용어만 틀릴 뿐 그 원인이 강압적 통제방식의 공산주의 때문이라는 사실은 은폐하고 있는 등 공산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음</p>
<p>사회 1 (성지문화사) p. 109</p>	<p>[북한의 식량문제] 1988년부터 1999년 사이에 UN의 인도적 식량자원은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남한도 1995년 이후 쌀, 옥수수, 밀가루, 비료 등을 지원하였다. 그리하여 북한 농업은 1999년부터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p>	<p>북한에 공급된 식량지원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배급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또 아직도 북한의 식량난이 엄연히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식량사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음</p>

<p>사회 1 (성지문화사) p. 113</p>	<p>[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 북한은 이 지역의 나진, 선봉(웅기) 지역을 ‘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여, 2010까지 동북아시아의 국제적인 화물 중계지, 수출 가공기지, 관광, 금융 기지의 기능을 가진 지역으로 발전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다.</p>	<p>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고 효과성도 아직 미지수인 북한의 선전용 계획을 과도하게 미화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북한의 실상에 대해 왜곡된 지식을 갖게 함</p>
<p>사회 3 (금성출판사) pp. 198~199</p>	<p>[북한의 생활풍습] <자료 1> 북한의 가치관과 일상생활</p>	<p>편향된 북한 소개임. 북한 정치의 독재성, 경제체제의 실패에 관한 언급 없이 북한의 가치관, 언어, 생활풍습 등을 평면적이고 우호적으로 소개</p>
<p>사회 3 (고려출판) p. 69</p>	<p>[탐구활동: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경제질서] 다음 우리나라 헌법의 경제관련 조항을 잘 읽고, 우리나라 경제 질서의 특징에 대해 탐구해보자.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126조 다음은 북한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이다... 제21조 국가 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 자원, 중요 공장의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p>	<p>북한헌법의 문제점을 전체 맥락에서 파악하지 않고 일정 조문만을 비교함으로써 북한헌법에 문제가 없거나 오히려 남한헌법보다 인간평등을 실현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p>

<p>사회 3 (금성출판사) p. 73</p>	<p>[우리나라 헌법에 나타난 시장경제의 제도적 원칙] <자료1> 대한민국 헌법(1987.10.29.) 헌법 전문 제15조... 제23조... 제119조... 제 126조... [자료2] 북한 헌법(1998.9.5.) 제20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 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제34조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제36조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p>	<p>대한민국 헌법과 북한헌법을 비교하고, 북한의 계획경제와 사회적 소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의도가 보임</p>
<p>사회 3 (중앙교육진흥연) p. 73</p>	<p>[탐구활동: 남북한 헌법조항을 통해 본 경제적 자유의 차이] 대한민국 제23조, 제119조 북한 제20조... 제34조... 제36조...</p>	<p>북한 헌법의 문제점보다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음을 평면적으로 소개</p>
<p>사회 3 (중앙교육진흥연) p. 102</p>	<p>[광복이후 한국사회의 변동과정] [남북 분단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립]</p>	<p>남·북 분단과 건국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지 않고, 6·25 전쟁의 원인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음. 남북사회의 성립에 대한 중립적 시각을 보이고 있으나,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남한사회의 발전에 대해서만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기술</p>

<p>사회 3 (디딤돌) p. 201</p>	<p>다음은 남한과 북한 주민들에게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들을 비교한 것이다. 위와 같은 차이점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말해보자. (표 참조)</p>	<p>남북한 경제, 사회·문화를 동일하고 다양성 존중의 차원에서 평가</p>
<p>사회 3 (고려출판) p. 69</p>	<p>[영어가 뭐길래...] 북한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1주일에 1시간씩 영어 등 외국어 교육을 시작했다.</p>	<p>북한의 개방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마치 북한이 상당 수준 개방을 실천하고 있는 양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실정과 다르게 북한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보임</p>
<p>사회 3 (고려출판) p. 183</p>	<p>[남북한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북한의 국가 명절 김정일 생일(2.16), 김일성 생일(4.15)... 인민군 창건일(4.25), 국제 노동자절(5.1),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7.27), 해방기념일(8.15), 정권 창건일(9.9), 노동당창건일(10.10), 헌법절(12.27) 등 소개</p>	<p>북한의 기념일 소개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소개하여 북한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산하려는 의도</p>

<p>사회 3 (중앙교육진흥연) p. 199</p>	<p>북순이: 우리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 생일, 정권 창건일, 노동당 창건일 등의 국가적 명절에는 다른 명절 때보다 더 많은 특별 배급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때를 기다린단다.</p> <p>남돌이: 우리는 추석과 설날이 최대 명절이고, 그 때가 되면 온 가족이 고향에 모이느라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지.</p> <p>북순이: 우리는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 4년으로 초등교육이 2년이 짧아. 등교시간은 7시 30분이고, 오전에 5~6교시까지 수업을 하지. 수업이 끝나면 도시락을 먹거나 집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수업을 시작해. 정규수업이 끝나면 생활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결의와 각오를 다지는 생활총화 시간을 가진 후, 당 정책 계몽 및 선전 활동 등 근로 봉사와 사상 교양을 한단다.</p>	<p>남북한 학생의 가상 대화를 통해 북한의 국가 명절과 학교생활을 우호적으로 소개</p>
--------------------------------------	-----------------------------------------------------------------------------------------------------------------------------------------------------------------------------------------------------------------------------------------------------------------------------------------------------------------------------------------------------------------------------------------------------------------------------	----------------------------------------------------

7. 통일지상주의의 확산과 자유민주적 통일 회피

출 처	문 문	문 제 점
사회 3 (교학사) pp. 176~177	[바람직한 통일방안은 어떤 것일까?]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이며 소 원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비교 하면서 자유민주적 통일이라는 ‘바른 통일’의 원칙 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사회 3 (교학사) pp. 178~179	[통일이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중략)현재 남북이 연결을 추진하고 있는 경의선, 동해선이 중국, 러시아의 철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철도를 이용해서 이들 나라 및 유럽 국가들과 활발 하게 교류하는 한편 풍부한 시베리아 내륙 지방 개 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통일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환상을 부여
사회 3 (고려출판) p. 181	경의선과 경원선이 복원된다면 중국, 몽골, 시베리 아를 횡단하는 철도들과 연결되어 유럽 지역까지의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통일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환상을 부여
사회 3 (고려출판) p. 180	이념보다는 민족의 이익이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잡게 되면서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 고, 그 결과 2000년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에서는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설정한 제2 단계인 남북연합단계와 북한의 연방제가 서로 공통 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통일방안을 소개함으로 서 통일지상주의의 환상을 심어 줌

8. 반미주의 및 친중적 인식

출 처	원 문	문 제 점
<p>사회 2 (성지문화사) p. 121</p>	<p>[나들이: 냉전 체제의 형성과 미국의 외교정책] 냉전 체제의 형성에는 소련뿐 아니라 미국의 외교 정책도 한 몫 하였다. 미국은 이미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무렵부터 소련의 팽창 가능성을 경계하였고, 소련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력이나 경제적 압력보다는 힘의 우위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p>	<p>냉전의 책임을 미국에게 두는 설명으로서, 소련의 체제 자체가 갖는 팽창주의적 특성을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무력을 앞세운 미국의 태도로 말미암아 냉전 체제가 형성된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미국 책임론을 강조함</p>
<p>사회 2 (성지문화사) p. 122</p>	<p>[탐구활동: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 (중략) 프랑스는 식민지를 되찾기 위하여 남쪽에 베트남 공화국을 세웠다. 그 후 미국이 남쪽을 지원해 주자, 이에 맞서 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이 결성되어 호 치민은 이를 적극 지원하였다. 미국이 북 베트남에 폭격을 시작하여 전쟁은 더욱 확대되었다.</p>	<p>베트남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된 것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전쟁이었는데, 이러한 원인은 설명하지 않고 미국의 참전으로 전쟁이 확대된 점만을 강조하고 있음</p>

9. 反시장-反기업

출 처	원 문	문 제 점
<p>사회 3 (지학사) p. 61</p>	<p>[2. 민주 시민과 생산 활동] 동국이는 아랫사람을 부하 직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후배’라고 부르는 회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회사를 방문하였다. 회사 관계자는 “창업주가 돌아가신 후, 창업주의 친인척은 창업주의 유언을 받들어, 경영인이나 회사 직원으로 일체 들어오지 않는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이 창업주가 아들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노사 화합은 근로자와 기업가의 이익을 함께 증진시킨다. (중략) -근로자와 기업가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책임이 있다. (후략)</p>	<p>기업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서술하여 기업소유구조를 왜곡시키고 있으며, 기업 본연의 활동 및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언급이 전무한 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만 과도하고 편향되게 전 페이지에 걸쳐 서술되어 있음</p>
<p>사회 3 (중앙교육진흥연) p. 47</p>	<p>[심화과정] 1. 어떤 기업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면, 이 기업이 얻는 이익은 무엇이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비용을 발생시키는지 생각해보자.</p>	<p>경제활동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마치 기업만의 잘못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사회적 이익을 얻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본문에서는 사회적 비용과 기업의 이익을 대비하여 기업의 이익을 폄하하였으나, 사회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p>

<p>사회 3 (중앙교육진흥연) p. 88</p>	<p>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공정 거래법과 같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당장은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자신도 피해를 입게 된다. 각자의 경제활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며, 서로 의존관계에 있기 때문이다.</p>	<p>시장경제 메커니즘은 “법과 제도 내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을 위한 경제 활동이 곧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으로 연결” 되는 것이나, 본문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며 시장경제가 가지는 메커니즘의 본질을 기술하지 않음</p>
<p>사회 3 (도서출판디딤돌) p. 67</p>	<p>그러나 지나친 이윤 추구로 사회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노동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고,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것을 기업윤리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한다.</p>	<p>지나친 이윤추구라는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표현으로 기업이 마치 사회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음. 사회적 환원은 기업의 의무가 아니며, 기업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p>
<p>사회 3 (도서출판디딤돌) p. 102</p>	<p>시장 경제의 규칙과 질서가 잘 지켜져 모든 개인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하는 식으로 행동하게 되면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p>	<p>합법적 범위 내에서 자신의 소득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를 합당한 것으로 보지 않는 반시장적 시각이 내포되어 있음</p>

<p>사회 3 (금성출판사) p. 62</p>	<p>[2. 민주 시민으로서의 생산자 역할] <생각열기> 몇 해 전, 가뭄으로 메말랐던 강에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나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다. 그 원인은 어느 공장에서 빗속에 몰래 버린 폐수 때문이었다. 기업가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사회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p>	<p>불법행위를 기업의 이익에 연결시킴으로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 본연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고 있음</p>
<p>사회 3 (고려출판) p. 78</p>	<p>[1.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주택을 투기의 수단으로 여겨 지나치게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많다.</p>	<p>개인의 재산을 어느 자산 형태로 보유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주택만을 자산관리 수단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은 반시장적인 서술임</p>
<p>사회 3 (고려출판) p. 85</p>	<p>우리가 저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만 한다면, 머지않아 사회는 붕괴되고, 결국 각 개인도 제대로 살 수 없게 될 것이다.</p>	<p>개인의 사익 추구가 공익에 연결되는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음. 보이지 않는 손의 힘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된다는 원리를 간과, 부정하는 내용임</p>
<p>사회 3 (교학사) p. 82</p>	<p>[3. 과도한 사익 추구 방지와 공동체 의식 실현]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이익 추구는 시장 경제의 토대가 된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과도하게 해친다면 사회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개인의 경제 활동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저마다의 능력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되,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이나 나라 전체의 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p>	<p>시장경제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활동이 다른 사람이나 나라 전체의 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과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부정적으로 기술함</p>

10. 배타적 세계관

출 처	원 문	문 제 점
<p>사회 3 (동화사) p. 35</p>	<p>[마키아벨리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 정치의 과제] 저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역사학자로서, ‘군주론’이라는 책을 써 근대 정치사상의 기원을 이룬 마키아벨리입니다. 제가 시대를 넘나들며 오늘날의 한국정치를 보고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는데, 보다 나은 한국의 미래를 바라는 충고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략) 첫째, 후삼국 시대를 방불케 하는 지역감정이 문제입니다. 둘째, 정치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뿌리 깊다고 느꼈습니다. 셋째,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를 걱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타협적인 정치행태도 질타받아 마땅합니다. 여기 인심도 얻고 저기 인심도 얻겠다고 원칙도 없이 타협적인 정치만 편다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불의의 세력과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겠지요.</p>	<p>마키아벨리를 빌려 한국정치의 병폐를 비판하면서, 투쟁적 정치의식을 심어주고 있음</p>

11. 기 타

출 처	원 문	문 제 점
사회 1 (지학사) p. 54	[수도권의 문제점과 대책] 수도권인구와 기능은 분산되어야 한다.	수도권인 문제점과 그 대책을 설명하는 단원인데, 다른 교과서와 달리 중간 제목으로 수도권인 인구와 기능 분산을 수도권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음. 현 정부의 수도 지방 이전 정책을 홍보하는 논리로 분석됨
사회 1 (동화사) p. 50	[수도권의 과밀화] 그러나 좁은 공간에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밀집한 결과, 자본, 기술, 물자 등이 전국에 고루 배분되지 못하여 지역간의 성장 불균형을 초래하였으며, 또 수도권 내에서도 주택 부족, 교통체증 등 심각한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성장 불균형’이라는 단어에 유독 붉은색 강조를 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화의 문제를 지역간 성장 불균형의 문제로 인식하게 함
사회 1 (동화사) p. 51	[환경문제와 대책] 그러나,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무엇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지방에 새로운 중심지를 개발하여 인구와 각종 기능의 분산을 꾀하고, 수도권 주민 스스로가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기능의 분산’이라는 단어를 붉게 표현하여 강조함으로써 수도권 환경 문제의 해결방법이 곧 수도권 기능 분산밖에 없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함

Ⅲ. 초등 교과서의 문제점 분석

출 처	원 문	문 제 점
도덕 6 p. 116	휴전선이 사라지고, 남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산가족이 만나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 후의 긍정적 모습만 표현함으로써 통일지상주의를 심어주고 있음
도덕 6 p. 121	왜 멀지도 않은 땅을 못 가는 걸까?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할아버지께서 불편하신 몸이라도 고향에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산가족이 된 원인의 설명보다는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면서 자유민주적 ‘바른 통일’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음
도덕 3-2 p. 82	[우리의 소원]	통일로, 이산가족의 눈물짓는 사진을 부각시켜 감정에 호소하고 있음.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을 단정적으로 언급할 뿐, 분단의 원인과 통일의 장단점 등은 언급하지 않음
도덕 3-2 p. 88	[별에게] ...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이 많아. 같은 조상을 섬기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문화를 가진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도와주면서 살아간다면 큰힘이 될 거야. 특히, 서로의 가슴을 향해 총부리를 겨눌 필요가 없고, 무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절약할 수 있겠지. 그 돈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좀더 좋은 시설의 학교도 만들 수 있을 거야.	통일의 장점만 나열하여 학생들 사고의 폭을 줄이고 있으며 감성적 접근을 통해 통일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음

<p>도덕 4-2 pp. 90~91</p>	<p>[어느 택시기사의 안보의식] (※ 동해안 북한 잠수함 신고 이야기)</p>	<p>간첩을 신고한 사실만 기술하고 있을 뿐 간첩이 왜 나쁜 존재인지, 또 공산주의의 실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므로써 학생들의 안보의식 고취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p>
<p>사회탐구 6-2 p. 130</p>	<p>[통일과 민족의 앞날]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은 남북한이 서로 적대감을 가지도록 만들었고, 그 후 남과 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p>	<p>6.25 전쟁의 원인에 대한 설명없이 그저 이 전쟁으로 남북이 적대시하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6.25 전쟁의 책임이 자칫 남북 모두에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함</p>
<p>사회탐구 6-2 pp. 130~145</p>	<p>[통일과 민족의 앞날]</p>	<p>통일에 대한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라기보다는 통일 지상주의적 일방적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음. 안보에 대한 논의가 배제된 통일만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통해 결국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을 해이하게 함</p>
<p>사회탐구 6-2 p. 141</p>	<p>[베트남과 예멘의 통일]</p>	<p>독일, 베트남, 예멘 통일의 긍정적 모습만 비취주고 있을 뿐, 이들 국가들의 통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외면</p>
<p>사회탐구 6-2 p. 141</p>	<p>[청소년 통일의식 관련 여론조사]</p>	<p>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통일 신드롬이 있을 당시의 청소년 통일의식 관련 여론조사를 2004년 교과서에 실고 있음</p>

<p>사회탐구 6-1 p. 141</p>	<p>[전세를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p>	<p>한국전쟁에 관한 언급은 극히 일부이며 ‘전세를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으로 처리함. p. 140에는 4·19 혁명은 원인, 진행과정, 의의 등으로 자세하게 처리했지만 한국전쟁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다는 언급은 없음</p>
<p>사회 6-2 pp. 128~145</p>	<p>남북통일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다. 그 동안 우리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조사해 보고...</p>	<p>통일지상주의의 관점에서 편집하였고, 통일을 위한 노력만 부각시킴.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에 대한 설명은 회피함. 1인당 GNP 비교를 통해 남북통일의 타당성을 주장함으로써 통일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음. 현 북한 시민의 상류층 모습(기차 출근, 백화점 등)만 보여줌으로써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을 차단시키고 있음</p>
<p>사회 5-2 p. 20</p>	<p>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사람들의 노력으로 성장해왔는지 이야기해 보자. 우리 경제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데에는 가정주부들의 노력이 컸다고 할 수 있어요. 국산품을 애용했고, 꼭 필요한 물건만 샀으며, 한푼이라도 아껴저축을 했지요.</p>	<p>개방화, 세계화 시대에서 “국산품만을 애용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발전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 시장, 반 세계화적 내용임</p>
<p>사회 5-2 p. 24</p>	<p>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민이 내 집 마련을 취소하거나 자가용 구입을 뒤로 미루는 등 소비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민이 외식비, 식료품비 등 생활비를 줄이고, 국산품을 쓰려고 노력하였다.</p>	<p>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유도해서 기업 활동과 투자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축소만을 미화시킴으로서 소비의 순기능을 왜곡시키고 있음</p>

【분석자료 목록】

■ 교과서

학 교	제 목	출 판 사
고등학교	정 치	대한교과서/지학사/천재교육
	경 제	천재교육/교학사/법문사/대한교과서/두산
	경 제 지 리	교학사/지학사
	생 활 경 제	대한교과서(이재웅 외), 대한교과서(임천순 외) 등 2종
	사 회	천재교육/법문사/지학사/교학사/중앙교육진흥연구소/ 대한교과서/두산/도서출판디딤돌
	사 회 · 문 화	천재교육/법문사/금성출판사/대한교과서/ 중앙교육진흥연구소/지학사/교학사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두산/법문사/중앙교육진흥연구소/ 천재교육/대한교과서
	도 덕	교육인적자원부
	법과 사회	교학사
	윤리와 사상	교육인적자원부
	전 통 윤 리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사 회 1	지학사/금성출판사/교학사/두산/동화사/도서출판디딤돌/ 중앙교육진흥연구소/고려출판/성지문화사
	사 회 2	지학사/교학사/도서출판디딤돌/동화사/금성출판사/ 성지문화사/고려출판/중앙교육진흥연구소
	사 회 3	동화사/교학사/고려출판/도서출판디딤돌/지학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금성출판사
	도 덕(수학년)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생활의 길잡이(수학년)	교육인적자원부
	도 덕(수학년)	교육인적자원부
	사회과 탐구(수학년)	교육인적자원부
	사 회(수학년)	교육인적자원부

■ KDI 세미나 자료

- 고등학교 경제분야 교과서 내용 검토 (선택과목)
- 초·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 경제단원 내용 검토 (국민공통기본교과)

■ 교과서포럼 심포지엄 자료

-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이대로 좋은가
- 중·고등학교 <경제> 관련 교과서 이대로 좋은가
- 한국의 국사학계와 국사교과서 편찬, 무엇이 문제인가

■ 기타

- 권철현 의원실, “금성출판사 출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분석”